

제427회 국회  
(임시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8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   |     |
|---|-----|
|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요청안         | 1   |
| 2.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           | 1   |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25 |
| 3.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125 |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호우와 어제 발생한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 연이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청문회의 배석자 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고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을 확인하여 해당 직책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 재난안전 등 국가의 주요 사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

(10시06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공직후보자 윤호중

○**위원장 신정훈**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며 정부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제 의정활동의 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토대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복지위, 기재위, 법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 힘써 왔습니다.

또한 당내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과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인구 문제, 균형발전, 국민 행복과 같은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제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밀거름 삼아 국민들께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정부 운영, 국민의 삶, 국가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업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방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민생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

서고 정부 전체의 AI 혁신을 선도하며 국민주권정부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이같이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하여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하여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 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정안전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AI를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하여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AI를 통해 K-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며 국민주권정부로 출범하였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눈 맞추고 동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늘 경청하고 국민 한 분 한 분 그리고 국정의 동반자인 지방과도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범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오늘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도 김민석 총리 위에 세워진 새로운 뉴노멀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지방시대위원장 한 분만 참고인 신청을 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는데 후보자 아들의 채용, 대체복무 그리고 거주지 관련 질의를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문회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오진 대통령실 비서관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무더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누구 인사청문회냐라고 따지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아들, 이모만이라도, 친인척만이라도 좀 빼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빼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인사청문회의 증인 신청을, 한 명도 지금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물타기 수법이고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청문회에서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요구 자료 관련 사항들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무산시켰으면 자료라도 잘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 610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312건이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지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후보자 아들에 대한 위장전입과 학적에 관련해서 밝히기 위해서 자녀 학적을 요구했습니다만 초중고 졸업 현황만 보내 왔습니다. 사실은 졸업 현황만 가지고는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적부라든지 여러 가지 입학·전학과 관련되는 사항도 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학적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그러면서 후보자 측에서는 ‘행안위에서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으니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서면답변으로 왔는데,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작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옵니다.

이게 인사청문위원을 갖고 놀아도 유분수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되는 자료는 전부 지금 미동의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농림사업 자금과 같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뜻뜻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조금 뭔가 숨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게 아니냐.

며칠 전에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 청문회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갑질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 고용노동부, 인권위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 본인이 미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받다가 결국 닦달 끝에 오후 늦게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24시, 청문회가 끝나

는 24시 전에 못 받은 자료가 국민권익위 자료하고 고용노동부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임금체불로 진정 2건을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요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후보자님, 당당하면, 당당하면 증인 신청이나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국민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려면 증인·참고인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충분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보다 더 실효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증인·참고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기록으로나마 좀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청문하는 거지 아들과 이모를 청문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와 예시가 없이 무조건 그럴 것이야라는 추론만 가지고 아들과 이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것은 가족 청문회지 그게 행안부장관 청문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공직자를 부르겠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불러서 토론하고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보이거나 정략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여야 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저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증인·참고인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유감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보다 질 높고 깊이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로 채택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만 그 근저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원인들이 있었다. 이게 장관후보 청문회지 가족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 꼭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성권 위원이 더 손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이성권 위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팔을 길게 뻗으면 장점이 있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건영 간사님.

저도 17대 국회의원 할 때 윤호중 후보자님하고 초선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후보자님이 그간에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훌륭하게 수행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후보자로서 또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후보자님도 국회의원 시절에 청문위원 활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그러면 적어도 입장이 바뀌었을 때, 처지가 바뀌었을 때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청문회 제도라는 것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공직 수행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그리고 그간에 공직자를 계속해 왔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보여 왔던 국회의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가족과 관련된 검증을 하지 말자고 한다는 그 자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에게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몇 차례 계속 했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대체복무 제도에 해당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를 했지요? 그건 사실이지요?

○위원장 신정훈 자……

○박정현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성권 위원 아니, 제가 자료 때문에…… 본질의를 하려면……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해 주세요.

○이성권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공을 안 해 줍니다. 3년간 대체복무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는데 같은 동일한 시기에 박사 과정을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나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연구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을 따져 보면 현행 규정상으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겸직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 게 인사청문회의 우리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부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본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좀 말씀을, 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후보자님이…… 한번 보십시오. 2023년 7월 21일 그때 외교통상위원회에 계셨지요. 그렇지요? 그때 인사청문회를 할 때 청문위원으로서 했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를 못 받고 있다. 아들과 관련된 병역 말씀과 관련해서 학력 관련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장관 하시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검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료제출 되지 않는다고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반사를 하면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자질과 능력 부분은 저도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도덕성과 그리고 또 공직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는지도 같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꼭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제 본질의 하기 전에 제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위원으로 자리에 서게 돼서 저 스스로 상당히 영광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야가 바뀌면서 항상 입장이 바뀌면서 제도도 그대로 관행도 그대로, 이대로 있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윤호중 후보자께서 그동안 인사청문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고 발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일에 대해 언행일치를 못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든지 그런 것이 인사청문회의 발전이고 나라의 발전이고 제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들은 내놓지 않으면서 70%가량 제출을 완료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자료 소실, 미보유,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이런 핑계로 내놓으면서 70% 운운하는 것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아주 촌철하고 아주 뼈아픈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언행일치를 하시든지 언행일치가 안 되시면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주셔야 되고요.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 재산 증식, 탈세, 업추비 논란, 아빠 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찬 비리 만물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2022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신 말씀인데……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지금 그런 내용들은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위원장 신정훈** 우선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의사진행발언과 아무런 상관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고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박수민 위원**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오전 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입장을 표명하시든지, 오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이달희 위원** 저는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광희 위원** 말씀 잘 듣고 또 후보자 검증을 좀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비롯한 충남 지역, 광주 지역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려서 비 피해가 심합니다. 5000여 명 이상이 지금 집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다른 분들도 엔간하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지금 마음은 이미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명이나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과 내일 수많은,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달희 위원님, 간단히 1분 정도로만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요.

제가 김경수 참고인을 신청했습니다. 청문회 할 때 정책 검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지역의 대구·경북 시도 통합 문제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5극 3특 얘기하시면서 특별하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아, 이재명 시대에는 우리 대구·경북 어떻게 하면 특별시로 통합할까’, 이 문제는 지방시대위원장하고 행안부장관이 함께 맞들어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될 일이라서 정책 검증을 정말 같이, 같은 자리에서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아까 윤건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쟁의 소용돌이’, ‘아직 임명도 안 된’…… 임명되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셔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고인 신청할 때는 정책청문회 하고 싶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때는 임명 안 됐어요.

○**위원장 신정훈** 아마 위원님들의 진의가 충분히 청문 당사자에게, 후보자에게 전달됐

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권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과정과 연관돼 있을 수 있는 정보도 있겠고 또 아들이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후보자의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소명할 말씀이 있는데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사 검증을 위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저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비롯해서 가족의 사생활,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제공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서범수 위원님께서 ‘610건 중에 312건이 미제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청문요구자료 온 519건 중에는 517건을 제출했고요. 서면질의된 644건 중에는 604건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할 수 없는 민감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취지로 그 자료를 원하시는지를 들어서 그 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달라, 아들의 생활기록부 요청에 대해서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이 학교를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라는 걸 확인하려면 전입학 자료를 포함한 학력·졸업 기록 이 모든 것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입학 기록이 포함된 학력 자료를 보내 드리는 등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노력이 충분히 위원님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충실히 제가 답변을 드림으로써 그 의혹을 해소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경수 위원장의 중인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셨는데요. 지방시대 위원회는 원래 주무부처가 균형발전을 산업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행안부가 하고 있어서 저희 행안부에서 사무처를 지원하고 있으니만큼 제게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을 받는 당사자는 공직자후보로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또 요구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에 성실히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7분으로 먼저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으로서 이미 오랜 의정활동에서 정책 역량과 리더십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적된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겠죠.

정책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누락 부분은 실수라고는 하나 제 생각으로는 행안부장관의 위치가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동안 2022년까지는 종합소득 신고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 22년이 코로나 위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임대소득, 그러니까 임대료를 한 절반 정도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 동안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은 음주운전 건인데요. 30년 전의 치기 어린 일이라고는 하나 행안부장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께 입장 표명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과 또 제대로 원칙을 지키고 살아오지 못한 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을 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정책질의 들어가겠습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자님, 매번 정부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면 한발 늦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늦고요 피해 보상도 늦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206일 만에 통과가 됐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51일 만입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110일입니다. 항상 뒤따라가는, 한발 늦는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의 근간에는 행안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정부의 늦장 대응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다가섰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힘든 선택을 하신 분도 많고요.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 내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사고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이후에, 대규모 참사 이후에 심리지원 사업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지점은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을 주무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요 중앙심리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제가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 결과를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인 지시사항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내용일 뿐이고요. 후보자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심리지원단은 주요 부처의 국장급 회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그런데 주무관이 참석합니다. 대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가 줌 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계신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줌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심리지원 사업의 주무 회의체인데 영 너무 엉성하기 짹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제대로 좀 챙겨 봐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심리지원단은 심리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재난 초기에 자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상담 요원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을 동원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중대한 정신적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에서 넘겨받아서 그분들의 PTSD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초기에 회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의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야 돼서 줌 회의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줌 회의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국장급 회의에 주무관이 참석하는 건 저는 과하다 싶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가족 심리 지원은 복지부에서 한다라는 게 일관된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여기 PPT에 보시면 왜, 중복 업무가 우려돼서 행안부에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가부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가족 자조모임의 지원 실적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행안부는 일을 떠넘기고 있고 여가부는 일을 안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방치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이 되신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회복과 치유는 정부 몫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빼짐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피해자 가족, 유족 모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유족 모임에 대한 지원도 저희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호우 사태니까 혹시 저희 행안부 오늘 참석해 주신 간부님들 응급하게 직무 복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나 하면 받아서 그 부분 꼭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님, 뒤에 배석해 주신 분들 중에 또 밖에서 보좌해 주는 직원들 중에 지금 재난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적절하게 업무에 배치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위원장님 제가 아직 장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시를 할 수는 없고요. 뒤에 배석한 직원들이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사회생활을 국회 보좌진으로 출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더 정확히는 출판사 직원을 한 1년 정도 했고요. 그 뒤에 정당의 당직자 생활을 한 게 20대 때부터입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최근에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아마 보좌진들, 후배 보좌진들이기 때문에 또한 특별한 감정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고 또 행안부에서 이제 국무위원이 되시면 많은 일선의 공직자들을 지휘하셔야 되는데 이 보좌진 갑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위원이 되시면, 또 후보자로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잘 설파해 주시기를 저는 꼭 기대합니다. 갑질의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문제이고 미래세대의 문제이고 또 대한민국이 후진적 관행을 탈피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모든 행동이 갑질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갑질은 앞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점차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그 기준 반드시 관철해 주시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다주택은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주거 수단이 될 주택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또 지금 현재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이 계신데 가능하다면 다주택자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다주택자에 대해서 후보자와 저와의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다주택자가 많아야, 오히려 전문임대사업자로 육성이 되어야 전세도 풍부하고 월세도 풍부하고 집값도 안정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시장경제주의적인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견해에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통해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박수민 위원** 과거 총선, 그 당시 4·15 총선이었는데 다주택 매각 선서를 공관위에서 주도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그때 논란이 불거진 게 다주택자 매각 선서를 다른 후보자들에게 강제하기 전에 본인은 자녀에게 중여를 했다, 이 논쟁이 불거졌던 적이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총선이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충분히 소명을 해 드렸는데요.

중여가 이루어진 것은 총선 전 9월이었고 서약서를 받은 것은 다음 해 1월이었습니다. 서약서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그해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시점이 11월이었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시점이라 마치 그 두 달 사이에 미리 알고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미 중여 시점은 9월이고 등기가 완료된 것이 11월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박수민 위원** 그 해명하신 내용 잘 봤고요. 저는 오히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여는 자녀에게 중여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로로서 자녀에게 중여하고 또 그 중여된 주택이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서 좋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좋은데, 그런데 다주택 매각 선서를 강요하실 때 다주택 매각이지 중여는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중여를 해 놓고 왜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매각을 강요하느냐 해서 제가 다주택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다주택을 징계하는 우리나라 세법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다행안부 관련된 것입니다. 종부세, 행안부도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이 다주택자를 징계하는 반시장정책을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고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시장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을 폭등시켜서 2030세대를 좌절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자녀에게 중여를 했는데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매각을 강요한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중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아

들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것은 장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장인이 손자에게 증여를 하셨는데 그 시점에는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증여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얻게 되고 소득이 생긴 뒤에 아들에게 다시 재증여를 한 것이라서 이 절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박수민 위원** 저는 증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왜 매각을 강요하셨는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과거 다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의 세율, 취등록세 중과 조치는 그것은 징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세금을 통한 징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왜 매각할 것만 서약을 받고 증여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은 다주택을 정리해 달라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민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채현일 위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바람에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 개편의 논의가 병행되고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 시대정신을 행정과 조직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이런 게 행안부장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출발점은 기능 재분배, 행정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지금 시대정신이 무엇이냐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기후 위기, AI 기술 혁명, 국제 질서 패권 경쟁 등 엄혹한 국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절박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정신은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간 현정 질서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 시대정신 실현을 아마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경우는 수사권 구조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기관 개편이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회장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안부장관으로 임명되면 경찰청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을 공소청과 중대 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경찰청도 행안부 산하에 있고 또 전반적인 수사 기능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청 내 국수본과의 수사권 중복·충돌 문제입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원칙에 따라서 오히려 수사는 행안부·경찰청, 기소는 법무부·검찰로 구분하는 것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채현일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찰청법 개정 때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공표를 하심으로써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만큼 그 논의 결과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현일 위원** 이틀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가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권력의 견제·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면, 가정을 하면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위원장님, 시간이 끝났는데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검찰에 하듯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수사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두어서 그러한 수사 영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사정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듯이 회의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7분 내에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지금까지는 한 3분 드렸는데 2분 정도로 정해서 공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일단 축하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서 행안부가 국무회의 서무, 정부조직,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지자체 사무지원·재정·세제를 담당하는 등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명의 국가·지방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13만 명의 경찰, 7만 명의 소방을 외청으로 둬서 어쨌든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행안부라고 생각합니다.

5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민주당 주요 당직자를 거치신 윤호중 후보자님이 국민주권정부에서의 역할 저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오송 참사 이미 언급을 많이들 하셨습니다만 수백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경찰하고 자치단체에 뻔뻔하게 떠밀어 왔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곳이 행안부인데 세수 결손이 발생하니까 지방교부세를 추경도 없이 마구 감액을 했던 것 역시 행안부였고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경찰국 신설해서

사실상 경찰의 목을 쥐고 흔들었던 것도 행정안전부입니다.

지금 그런 부처의 정상화를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수장부터 시작해서 다 망가져 있던 행안부를 정상화시키는 막중한 책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각오를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의 직원들을 본 바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부가 특히 행정안전부가 몇몇 잘못된 수장 때문에 해야 할 임무를 해태한다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공직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 어제는 충청지방 그리고 경기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광명의 아파트 화재사건 때문에 두 분이 희생되고 60분 넘는 분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화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또 지자체와 협력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대로 된 수장이 잘 이끌기만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 정부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고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께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계신지 또 어떤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지 미리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한분이라도 아쉽게 희생되는 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강조하신 지점입니다만 첫 번째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정책 및 재원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찰국을 폐지해서 조직을 쇄신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현실 인식에 대해서 앙이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역량을.....

장관만 바꾸면 된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지난 정권의 반민주적인 경찰국 신설 문제나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데에 앞장섰던 고위직들이 있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장관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할 때는 기강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 주신 말씀은 장관에 취임하고 나면 엄밀하게 내용을 따져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경찰국 신설 여론을 조성하고 논리를 제공해서 한 데다가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오늘은 특정 안 하겠습니다만 조치가 안 되면 다음번에는 특정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영전해서 올라간 다음에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행안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요. 그런 자리를 하던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부지사 맡고 부시장 맡고 인사권을 다 휘두르는데 어떤 지

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다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자들이 자기들이 반대하던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찬성을 하면서 승진의 꿈을 또 헤우고 있다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충성심을 보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지방행정을 망치고 경찰을 망친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사적 책임을 좀 물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좀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좀 전에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재난 대비를 하는 재난안전본부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다른 공직자들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면밀히 그 행적을 다 따져 보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명을 공개하거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후보자가 행안부장관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이 또 이재명 정부에 편승해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찰옥수수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지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위원님, 특산물이 많이 느셨습니다. 21대 때는 세 개만 말씀하셨는데……

○**박덕흠 위원** 예. 같은 충에서 한 14년 이렇게 같이 지내셨는데 그래도 또 질의는 해야 되잖아요? 질의를 할 텐데, 어쨌든 어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보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17대 국회 당시에 2004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3년간 에너지개발회사 에어원도우라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거기의 수석고문을 겸직했다고 사무처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당선 전에 구리 열린우리당 지도위원장 이런 게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그 시절에, 2004년 기사에는 후보께서 친구와 함께 에어원도우를 설립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어원도우하고 어떤 관계인지 또 수석고문직을 맡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기 때문이요, 특히 해외 자원 개

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것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이어져서 그동안 겸직 신고를 하고……

○**박덕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에어원도우를 같이 설립한 것은 맞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같이 설립했다기보다는 나중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요.

○**박덕흠 위원** 후보께서 인정 요구 자료 답변서에는 수석고문직은 비상근 직책으로 별도 보수는 없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맞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17대 국회 당시 참여연대가 국회 정보공개청구 자료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보께서 에어원도우 수석고문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겸직 신고를 할 때 수석고문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급여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안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후보께서 2004년 11월에 보면 본인 자비로 이란을 방문해서 에너지부장관 또 차관을 만나고 또 에너지단지 등 산업현장을 시찰했다고 국외활동신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비로 이란을 방문하고 에너지부장관을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자비로 갔다는 것이 에어원도우 회사 임원들하고 같이 간 거였고요. 가서 상대국의 관계 공직자들과 면담이 이루어져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겸직이 가능한 때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겸직이 가능할 때입니다.

○**박덕흠 위원** 다시 PPT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이란을 방문합니다. 또 거기에서 에너지부장관도 만나고 했는데, 그 뒤에 후보께서 두 번째 이란 방문 이후 일주일 만에 에어원도우는 건설비용 만 1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자발전소 사업권을 따냈는데 당시 기사에는 특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 당선 전에 친구와 에너지개발회사를 설립하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도 해당 회사의 수석고문직으로 보수를 받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두 차례 이란 에너지부장관을 만나고 산업현장 시찰까지 한 다음에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권을 따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특별한 의혹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은 없고요. 이 사업권을 따게 된 것은 제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덕흠 위원** 글쎄, 물론 다 같이 공동으로 따냈지만 두 차례 이란을 방문해 갖고 이렇게 큰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 자체는 국회의원의 힘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당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국내의,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특혜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이런 계약이 비록 MOU 단계라서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계약을 성사시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익 차원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맞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그런데 당시 같이 설립을 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에너지개발회사를 운영하는 데 참여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산업위에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애와홀딩스라는 회사는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거기에 또 구 모 씨가 설립을 했는데 그때 낙선 후지요, 후보자님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2008년부터 적을 둔 적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보수도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받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보수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역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당시에는 유전이나 가스전 내지는 발전소 이런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이나 이런 분야를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직자 시절부터 지금 5선 의원, 원내대표, 당사무총장, 비대위원장, 그동안 국민과 당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로 인해서 쌓아신 많은 경험들이 행안부의 상식적인 정상화와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모경종 위원** 장관후보자께서는 '5국 3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하던 당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를 어떻게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방정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모경종 위원**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라고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금 대통령께서 열심히 말씀을 혼자서 외치고 다녔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의,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권한과 행정적·재정적인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예전부터 대통령께서 생각을 해 오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20대 때 정부가 제출한,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라고 하는 말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의 자치권을 가진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 확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정지원, 규제 완화, 특화발전 특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 이 부분 잘 챙겨 주시리라 믿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모경종 위원** 후보자께 서면질의를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5극 3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5극 3특 중에 5극이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5극은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 그리고 TK 또 부울경 이렇게 다섯 곳을 말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수도권 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이 5극 3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국민주권정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내에서 서울이 아닌 일부 수도권 지역이 겪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현재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구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구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는 제 지역구인 구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도 수도권 안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누가 보더라도 주민 혐오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니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너무나도 100점짜리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화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접경지역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대남방송·대북방송이 서로 막 켜지면서 주민들께서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 군사시설로 인해서 제한이 많이 걸려 있던 곳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 님비시설이라 불리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꼭 필요

로 하는 시설,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시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그동안 못 받아 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상수원 지역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맞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도시 전반의 브랜드 또는 도시 전반의 이미지 자체가 많이 하락되어 있고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수도권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지 마시고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지역이나 소멸지역 그리고 이런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는 5극 3특 전략이 추진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국토의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반쪽만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행안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다른 국토교통부나 농림부나 또 산업자원부, 국방부, 모든 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5극 3특 체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빠짐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협의를 이루어 낸다든가 새로운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새로운 협약, 규약 같은 것을 맺어 나가면 그것을 법률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도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모경종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구리에서도 버린 쓰레기와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가 다 방금 말씀드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충남은 이틀 동안 500mm 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내렸다고 하고 특히 주말에 한 300mm 정도 더 비가 내릴 거라고 해서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이재민과 사상자가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금 부재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번 청문회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데 야당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지역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 문제하고 지방재정의 취약성 문제인데요. 이미 모두발언에서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건 아실 거고요.

지금 4년 차 정도 됐고 저희 대덕구도 관심지역이어서 한 18억 정도의 기금 배분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표는 인구 유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응기금이 제대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난 22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가 돼서 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용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사업 예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기금 운용이 2031년까지니까, 4년 차니까 절반이 갔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의 기금 운용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앞으로 장관이 되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구감소지역이니만큼 정주인구를 늘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주인구가 아니더라도 관광객을 비롯해서 생활인구를 늘려서 그 지역에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그것을 보고 정주인구가 들어오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서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전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무슨 SOC처럼 사용하는 게 기금 운용의 경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의 경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유연하게 풀어줘야 되고 포괄 예산으로 운용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 1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기금의 액수를 더 늘리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31년이 되면 인구감소지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031년 이후에 이 기금 문제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2031년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미리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그 이후에 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제가 인구 감소도 있지만 재정이 취약한 것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3단계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문재인 정부 때 국세와 지방세를 6 대 4까지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 윤석열 정부 와서 오히려 8 대 2로 다시 회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6 대 4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다른 정책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진하실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정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국가의 정책들, 그 정책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방 일괄 이전법에 의해서 사무가 많이 지방으로 이전됐는데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핵심적인 사무는 오히려 중앙이 갖고 있고 일이 많거나 그런 사무만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방사무가 내려갔을 때 관련된 예산이 명확하게 따라가는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특히 저는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 차등, 차별이 크다, 차이가 크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분명히 부동산 가격의 등락 폭도 다르고 등락 시기도 다른데 일률적인 정책이 집행되는, 국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폐단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통교부세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을 통해서 기초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기초지방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충분히 검토해서 또 업무를 하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일단 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고동진 위원** 자료를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하고 배우자, 자녀하고 전입 내역을 봤는데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96년 8월에 가족하고 합가하지 않고서 가평군으로 어떻게 혼자 전입을 하셨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총선 출마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답을 제가 받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95년도에 제가 당시 민주당입니다, 가평·양평지구당

위원장은 맡아서 95년도 첫 전국지방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가족분들이 삼성동에 이렇게 가신 것은 연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가평에 같이 내려갔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는, 그러니까 96년도 총선 출마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강남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삼성동으로 특별히 가신 것은, 그런데 본인은 안 가시고 애들하고 가족만 갔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홀로 가평에 남아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가평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삼성동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차관아파트 거주한 기간이, 한 4년 정도 거주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4년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청약제도를 보면 강남구도 그렇고 특정 지역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했고 분양권 전매제한까지도 사실은 그때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후보자와 배우자 청약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문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을 잘 안 해 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청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무주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고동진 위원 배우자분도 청약……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청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동진 위원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당시에……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좀 해 주면 되는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영등포구 양평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행안위에서 질의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년 전에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자료를 한번 좀 볼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겠는데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때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지금의 행안부장관후보자가 다른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아닙니다. 생물학적 동일성이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청약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책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만들겠다,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고 나중에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AI 패권 시대에 정부조직 개편도 그렇지만 그 중심에 전력, 에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AI 시대의 전력 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24시간 대용량 저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원자력발전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전부 원전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를 확대하는 방식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이 경우 전력, 원자력 등 의 기술산업이 환경의 하위 주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께서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인 입장을 선회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던 분이에요.

또 새로 신설된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산하에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이분이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책을 낼 정도로 극단적인 탈원전 정책 지지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직하고 이 취지가, 뭔가 인사가 미스매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AI 시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원자력의 문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과 그리고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운영과정의 에너지 단가가 매우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에너지원이기는 한데 안전성 문제겠지요. 최근에는 소형……

○**고동진 위원** 안전성은 많이 보강이 돼 있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왜냐하면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보면 원전 중요합니다라고 답은 하는데 실제로는 RE100 산단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앞뒤가 좀 틀린 이재명 정부 행태에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되신다면 AI 시대 정부조직 개편에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타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트롤타워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AI를 범용기술로 보는 국가적 전략과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 측면에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AI디지털혁신부 같은 부서를 만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부처의 AI 도입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안부장관으로서 조직을 운영하시니까 그럴 생각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가 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부처의 신설이나 폐합에 관한 문제는 정권의 철학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지금 고동진 위원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대통령님 또는 지금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잘 전달해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후보자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양부남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21대 때 법제사법위원회장을 하시고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합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4대 법안이 입안돼 있고 이게 법사위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행안부장관님과 관련된 법은 중수청 설치법입니다. 중수청 설치법에 보면 중수청의 소관을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검찰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또 그리고 범죄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으로 행세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의 측면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수사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목표 일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소속에 중수청을 둔다. 현재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공수처가 있고 경찰청이 있고 중수청이 있는데 3개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을 행안부장관 밑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본질적 목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행안부 내에 중수청을 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맥시멈 이 정도 답변하시리라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법이 의결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의 기관을 한 장관 밑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중수청의 수사관을 다시 모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 있는 수사관을 모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공수처가 초기 발족했을 때 인력 문제로 목적한 바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제2의 초기 공수처가 될 가능성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만약 행안부로 중수청이 가게 된다면 이 점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고려해야 될 텐데, 혹시 행안부로 중수청이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점, 인력 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률가, 변호사를 포함하여 판검사,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법률가들께서 수사기관의 근무경력을 쌓고 싶어한다는 말씀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중수청은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수사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사 베테랑들이 와야지만 중수청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는 다르지만 만약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간다면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안에는 경찰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된 뒤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사 종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경찰청장들에게 그런 통계적 시스템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마이동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수사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검경 수사권이 이양된 후에 많은 경찰분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과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 경찰관들의 수사 기피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의 국가수사본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수사기관이 행안부로 오든지 간에 수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특히 범죄수사 중에 마약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수사가 경찰로 이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충에 의해서 마약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외압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압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행안부장관으로서 방패막이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유성곤이 아니고 위성곤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권 위원** 제 귀에는 위성곤으로 들렸어요.

○**이달희 위원** ‘위’로 들렸는데요.

○**위성곤 위원** 그래요?

○**이달희 위원** 예, ‘위’로 들렸어요.

○**위원장 신정훈** 발음 잘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꾸 위원장님께서 유성곤이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제 앞에 계신 이성권 위원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필요하시면 속기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초선이었을 때 저희 당 정책위원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5선 의원님이시고 또 원내대표, 당 사무총장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역임하셔서 저는 충분히 행안부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든든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 꿈을 이뤄 내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006년도에 대통령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니까 행정체제를 도와 4개 시군이 있던 것을 1개의 도로 통합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제주를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실시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 꿈이 진행된 지 19년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고 또한 큰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많이 성장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그 당시의 꿈은 전체를 1개 도로 했었는데 다른 시도는 바뀌지 않으면서 저희 지역주민들은 너무 불평등하다, 왜 우리만 시장을 우리 손으로 못 뽑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못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 언제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최대한 빨리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대한 빨리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상 자치단체의 신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 그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그 요청을 하실 요량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전히 성숙이 덜된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가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라고 하는 의논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선택이 되어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개면 3개, 2개면 2개 이렇게 안을 하나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미 제주도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3개의 시로 기초자치단체를 하자라는 안을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물론 그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민 전체적인 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제주도민 내에 그런 논의와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면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위기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위기가 가장 큰 3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책을 총괄하고 자치행정을 지원하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기후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분야의 기반 구축 노력과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2년간에 탄소중립 관련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굴, 아이디어 공모,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관련되어진 사업과 담당 조직을 없애 버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내에 담당 조직이 반드시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는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요. 지금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재해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부처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기후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곳도 행정안전부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환경부에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자체와 협력사업들을 많이 해 나갈 터인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도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분만 가능한가요?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아니……

○**위성곤 위원** 마무리를 좀 지어야 돼서요.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 저는 행정안전부가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런 활동을 독려해 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재난에 있어서 기후 관련되어진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기관이 필요해서 사실은 관련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이든 반드시 탄소중립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갈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후보자님, 정당 당직자로 출발하셨다니 각 당에서 고생하는 당직자들에게 희망의 표상이 될 것 같아서 뜻깊은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번 대선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49.3%였던가요?

○**이달희 위원** 예, 반이라고 보면 되지요.

후보자님, 행정부의 수장은 편향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신념에서 나온 편견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이런 걸, 후보자님 철학 공부하셨으니까 니체가 한 얘기인 줄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주당 5선이고 정치 오래 하셔서 정말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여당의 든든한 평가에 또 야당 위원으로서 편중된 그런 편견은 없으실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내가 맞아’ 하고 굳게 믿고 진실을 들여다보기는커녕 그동안 오랜 정치 구력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진 그걸, 물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내는 건 맞는데 그동안 평생 공직 하는 공직자들과 맞서는…… 맞서야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편향된 것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의 삶 중에서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에 가담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 사건으로……

○**이달희 위원** 그래서 징역 10개월 처분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것 때문에 군대도 못 가고 이랬는데 제가 1심 판결문을 후보자께는 못 받았는데 유시민 작가의 ‘아침으로 가는 길’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윤호중 후보 부분의 챕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한 말씀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84년도 9월 달에 있었던 서울대 외부인 감금 폭행 사건은 제 관여 여부 정도를 떠나서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던 이 학생들로부터 외부인이 기관원으로 일하는 오인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감금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연관이 돼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그 뒤로도 평생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A분에 의하면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옷을 전부 벗겨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 바닥에 끓어앉게 하여 각목으로 허리, 하퇴부, 흉부 등을 수회 구타’ 뭐 다른 것 좀 생략하더라도 B 사람은 ‘다시 화장실로 끌고 가서 팔과 다리를 잡고 피고인 머리를 잡고 세면대 물통 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방법으로 폭행해서 30시간 감금’ 뭐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후보한테 받은 자료가 아니고 그 책에 그대로 수록돼 있어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책에 수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도 82학번입니다. 동시대…… 소위 우리 학내에 프락치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축제 기간에 들어온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수십 시간 감금하고 잔인한 폭행을 가한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시대를 담아내는 행동이었고 또 처벌까지 다 받으셨는데 우리 신념에 의한 그런 편견, 선입견 때문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5선 하시는 동안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게 행정에 가셨을 때도 편견으로 혹시 발휘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 사건을 제가 끌어온 겁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당시에 저는 서울대총학생회의 부활 과정에 총부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학생들이 외부인을 데리고 와서 폭행하고 감금하는 데 직접적인 관여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1학기 때부터 학생운동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해 왔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 의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후보께서 주신 판결문이 아니고 책에 나온 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그리고 후보자께서 정치 할 때, 법사위원장 계실 때 조수진 위원께 동아일보 같은 지라시 만들 때 나오는 벼룩이라든가 서울시장후보한테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분리수거

잘해야 된다고 하시던 이런 말씀들은 정치권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어도 이제 행정을 하시려면……

저도 짧은 기간 행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단체장의 당적 색깔 유무를 떠나서 모든 공직자들은 전국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편견 안 가지시고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직접 폭행이나 이런 것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학생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리고 막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의 피해를 입으셨던,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당시 서울대 학생운동을 대신해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때 당시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추호도 후보자를 변호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학내 상황은 거의 전쟁터였지요. 그냥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청커버라고 이야기하는 백골단이 1000명 이상 상주해 있었고요.

○**서법수 위원** 위원장님, 마사지하지 마시지요. 그냥 마치시지요, 뭘 그걸 마사지를 하십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학내에 상주해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던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을 헤쳐 온 우리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마사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과제다 생각합니다. 마사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시대의 문제를 함께 또……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같은 시대를 겪은 사람인데 위원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그 피해 때문에 정신……

2006년도까지 이분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한 분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맞고 집에 와서 온몸이 시퍼래서 공무원시험 공부하고 있던 사람 고시도 포기하고 혀소리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시절을 저희들도 다 돌 던져 보고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보자께서 반성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 네 명의 이 정상적인 생활…… 이분들도 다 그때 같은 20대였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그때, 후보자께서 학생회장으로 반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지금 담아내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한 분

은 10개월 하고 장관도 되시는 이 마당에 이분들 4명은 제대로 생활도 못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반성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제가 모두발언에 그 시대의 아픔을 다 같이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과하십니다.

○**위성곤 위원** 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용혜인 위원**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정훈** 제가 후보자나 우리 세대가 겪었던 이야기를 후보자의 변명을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40년이 지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옆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요 학내에 상주해 있던 수많은 프락치와 수많은, 소위 말해서 관, 경찰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저는 추호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때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로서 책임감과 도덕적인 어떤 반성 그 부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시는 국민들이 그 시대를 이해할 때 40년 전에 그 학원 내에서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돋는 것에 추호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왜 이해를 강요를 하세요?

○**이달희 위원** 국민들이 모릅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감사합니다.

○**정춘생 위원** 누구보다도 잘 훌륭하게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해 내는 검찰 개혁 입법도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제반 조치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성실하게 함께 힘을 실어서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되었는데요. 이것은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행안부 차원에서 경찰국을 직제 개편을 해서 폐지하는 것을 우선 처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민주권정부에 맞게 정부조직 개편도 있어야 하고요 그에 따른 각 부처의 직제와 정원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행정안전부 업무에는 정부조직과 정원의 업무도 있고요 정부혁신의 업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그거 아십니까? 거의 모든 부처와 정부부처와 기관에 검사들이 비정상적으로 포진해 있고 각각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검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가히 검사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검사가 파견된 주요 부처 및 기관의 목록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총 37군데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를 보면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됐는데요 이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극심한 갈등이 있었을 때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검사 파견이 한동안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파견을 보냅니다.

이거는 첨예한 갈등 문제들을 타협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같이 공감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렇게 많이 파견되게 된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검사가 파견된 기관의 파견 이유를 살펴서 합당하지 않은 파견은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법무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잘 아시겠지만 사법·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2021년에는 검사 파견 3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려 58명으로 급작스럽게 뛰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법무부는 보면 장관도 검사, 차관도 검사, 심지어 법무부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법무실은 실장부터 국장,과장까지 죄다 검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역시 파견된 이유가 반드시 검사여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문민화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정춘생 위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법무부가 아니라 검사부라고 그렇게 비아냥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

다.

다음 화면 보시면, 올해 5월 기준입니다. 법무부 과장급 이상의 검사 보임 현황입니다. 전체 인원 71명 중 32명이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일반직이 보임할 수 있는 직제 38개를 보면 검사가 24명, 일반 공무원이 불과 12명, 반절밖에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반 공무원이 보임했던 직제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를 보임하거나 직제를 다시 신설해서 10명 이상을 추가로 기용한 결과입니다.

현재 검사는 검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법무부를 비롯해서 각종 부처와 기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영향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각 부처에 파견된 과연검사 제도를 없애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각 부처에도 법무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무와 무관한 검사 파견은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아까 첫 번째 PPT를 보시면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 없어도 되는 금융위, 금감원, 식약처, 특허청, 환경부, 외교부, 교육부, 서울시 그리고 국제기구에 다 포진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완수가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4법이 9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1년의, 그러니까 현재 제출된 법안이 아니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원복했던 이런 부분을 다시 고쳐서 제대로 경경 수사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될 의무가 우리 후보자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만약 장관에 임명되게 되면 법무부와 협의해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법무부가 또 해당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직제와 정원, 정부 혁신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개혁이 되고 국민주권 정부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검찰국을 빼면 나머지는 굳이 검사들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인력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법무행정관이라는 것들을 뽑아서 나머지 부서의, 법무실, 특히 인권,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 업무를 중시해야 될 부서에 대해서는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시민, 국민의 인권보호 시각에서 법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의 준비기간 동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우리 법무·검찰 행정에서 법조일원화를 20년 가까이 추진해 왔는데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도 검찰, 검사들이 주로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것보다는 인사가 두루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초 잠깐만 멈춰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성권 위원 위원들의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적시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사회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 본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아까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교와 관련된 연구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교육부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부동의를 해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병역과 관련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고.

다만 병적기록부의 경우에는 병역기록 외에 다른 건강 관련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료기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권 위원님께서 병적기록부의 어떠한 사항을 원하신다라고 특정해 주시면……

○위원장 신정훈 이렇게 하시지요.

○이성권 위원 전혀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것,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구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넣어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본질문에서……

○이성권 위원 본질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는.

그러니까 대체복무 기간 중에 현행법상 할 수가 없는 겸임 업무들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님, 질의를 하시지요, 질의를.

○이성권 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받으면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것은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성권 위원 예,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주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호중 후보자께서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에 다른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정치개혁과 또 지금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

에 개헌에 대한 주장과 대안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그런 선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정치 개혁과 개헌에 관한 소신 변함이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변함없습니다.

○**이성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본인의 소신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그러면 이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작년이지요. 작년에 윤호중 후보자께서 24년 5월 13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무당적화 그리고 권한 제한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소신 변함이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회피 또는 기피해야 할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특별검사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성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 차원에서 주장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저는 도무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PPT 한번 보시지요.

그러니까 정권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당일 날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그리고 또 기자회견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제도화하라는 겁니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정 대통령의 문제가 아닌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쭉 설명을 했어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쟁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식 속에서는 특정 정권이 아니고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종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이 개헌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개헌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개헌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놓은 건데 결국은 이 말은 지금까지 87년도에 마련한 6공화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써 일반 법률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을 바꾸자고까지 주장을 할 정도로 대통령의 무당적화 제도를 얘기하셨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권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이라면, 지금 후보자는 국회의원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무위원직을 가져서 가장 대통령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당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봐 온 이때까지 한국 정치의 문제 때문이라도 반드시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무당적을, 이것 개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고 정당에서 결의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헌까지 가면 제일 좋고. 그래서 무당적화를 하자고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적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는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도화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가 가져왔던 평상시의 소신인 대통령의 무당적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실현을 시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는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을 관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수사지휘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권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지금 보면 제가 우려되는 점이 뭔가 하면 일단 2021년에 검경 수사권 1차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22년에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미제사건, 6개월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6개월 기준으로 보는데 6개월이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이 검경 1차 조정 이후에는 9.7%, 2차 조정 이후에는 14.0%로 급증을 합니다. 심각한 거지요, 사실은.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그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관련된 수사 지연이 급증하는 추세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부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기 같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령·배임은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과거에는 10%대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36% 혹은 50%까지 급증을 해 버립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긍정적인 어떤 목표, 정책적 목표가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민생과 치안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정책 목표에 반대되는 결과도 나온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수청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에 보면 이게 행안부장관 밑으로 가는 모양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중수청이 가지는……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지요.

기관 간에 평통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만 일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기관 간의 권한 조정 그리고 수사권이 어디에 귀속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권한을 갖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범죄 수사가 자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그러니까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보다 더 큰 수사 권한을 줌으로써 거기에 맞는 실력 있는 수사관들을 확보하고 또 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 이광희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광희 위원** 저는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30년이에요, 단체장으로 따지면, 의회로 따지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안 들리던 말이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자치라는 얘기가 없어지고 30주년 토론회도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국회에서 강력하게 행안위에서 주최를 함께 하자고 해 가지고 6월 27일 행안부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7월 29일에는 후속 행사로 지방자치 청년정책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 광역단체들은 적어도 30주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30주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30년은 고사하고 2002년도 제가 처음 지방의회의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주장해서 준비를 할 즈음에 그 당시에 인구소멸 예상 지역이 네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저 화면에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광역단체 17곳 중 8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요, 기초단체 228곳 중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중에서 경북, 전북, 전남은 90%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이 주무부서인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방소멸 또 인구 감소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과 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민간의 기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충해 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매우……

○**이광희 위원** 후보자님, 말씀 중에 말씀 좀 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방법들이 모두 다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행안부의 일부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30년 전부터 지역창생사업을 통해서 총리가 직접 하는, 그래서 지금 2기 지역창생이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지역창생과 관련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수백 개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단 한 곳이라도 성공한 지역소멸지역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성공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광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무려 138곳, 광역까지 쳐서 다 실패하고 있으면 이제는 30년이 됐으면 전면적인 문제 제기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운영하는 곳은 또 어떠냐,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거 보면 위의 거는 2023년도 거고 밑의 건 2024년도입니다. 한국리서치가 23년, 24년 1년 동안에 걸쳐서 한 건데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효능감 더 낮아지고 주민 의견 제시 기회 더 줄어들고 주민들의 참여율 더 낮아지고 단체장의 기대감도 낮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신 커지고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고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한 진척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지금까지……

다음 넘겨 주세요.

저는 그 문제점을 기관대립형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단체장이 제왕적 구조인 지방자치 단체 30년 그간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보면 지방의회 권한과 이렇게 나뉘 놨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제출권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편성권·제출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의안 제출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기초지자체에는 많은 곳은 70%까지 단체장이 조례까지 다 만듭니다. 1명이 다 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 현재의 지방자치, 이 상태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초지자체장의 중심을 읍면동 단위, 풀뿌리 민주주의 단위로 운영 방식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일부 지역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 운영 방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단체장을 그냥 지방의회에서 뽑기도 하고 또 어느 동네에서는 동장을 의원들이 겸직을 하거나, 어차피 우리는 동장 직선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번에 장관님이 되시면, 과감하게 실

현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인구소멸지역은 정말…… 대한민국은 머리와 가슴만 남기고 손과 발은 다 사라지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몇 가지 지역소멸기금 만들어서 돈 좀 주고 이런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절박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뛰어넘는 지방정부 수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첫째고요.

○**이광희 위원** 지방의회법까지 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지방의회법도 지금은 없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일부 결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광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제가 할 말은 많고,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9기 지역구 시도의원 무투표 당선 비율입니다. 무투표 당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는 무려 69%고요 전북은 61%가 무투표 당선되고 있어요. 단체장이 일인지하 만인 지상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자치의원들은 다 무투표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저는 2인 선거구 없애고 3인 선거구 이상 5인 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에는 대선거구 그러니까 4인 선거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결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아니 아니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시간이 오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봐도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했었던 인구소멸이나 지방자치와 관계된 거의 모든 것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광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30주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30주년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광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후보자님, 임용 축하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 후보자님의 합리적이고 온화한 리더십 그리고 오늘 청문회 답변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를 여러 위원들이 하시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계셨고 제가 보기에도 장관님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계신데 지위상, 위치상 말씀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온다고 해서 장관님 권한이 커지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제가 현직 경찰에 오래 몸담은 경험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 수사에 또는 앞으로 편입될 중수청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이 전혀 없고 또 이제까지 관행적으로도 그래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특정직으로 전환해서 중수청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사검사의, 검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법무부로 가고 거기에도 영장 청구권도 그대로 보유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후보자님,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검찰 시즌 2일 뿐더러 과거의 그 악명 높았던 중수부를 오히려 중수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는, 이것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서 정부의 법안이 제출되면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상식 위원** 지금 일반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을 기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분리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장관님, 지금 제가 보기엔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이거든요. 영장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장 업무는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헌절 77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지금 77년간 영장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영장농단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저것 한번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공수처의 출범으로 일단 독점은 깨졌다고 봅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죄종이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데요.

지금 비상계엄 중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각각 3회, 2회 신청했는데 모두 불청구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고 이게 나중에 구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그런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니까 이것은 또 가로채기를 했고요. 또 장관님 아시겠지만 영등포서 마약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여섯 차례나 기각을 했다, 불청구를 했다. 그래서 진실 발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장 불청구가 시국 사건, 정치적인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했는데 이를 분리하려면 당연히 영장 발부를 해야 하는데, 구속을 해야 하는데 이를 불청구해 가지고 의붓딸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관님,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 그래서 현직 검사 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영장 청구나 통신 사실 조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영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소청, 기소청의 검사는 어디까지나 기소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수사의 핵심인 영장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적합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들 간에 의견이나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들의 침해를 구제하는 그런 기능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사의 수사기관 전체, 이것은 중수청도 마찬가지고 특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소청의 검사가 불청구를 했다 이럴 경우에 기소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저번에 이광우하고 김성훈에 대한 영장 불청구 때 경찰이 서울고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결국 그게 억셉트(accept)돼 가지고 영장 청구는 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원용하자는 것이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특정 권한이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것은 다른 폐단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서로 권한을 나누어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준칙을, 그러니까 경찰청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수사 준칙의 개정 과정에서 그러한 원칙과 정신이 잘 발휘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후보자님, 지금 경찰은 제가 보기엔 자기를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합당하게 민주적인 통제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검찰 이런 것을 떠나서……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상식 위원** 일을 할 수 있게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이런 논조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후보자님, 2004년부터 한 20년 넘게 의정 생활을 같이 해 온 동료 의원을 청문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후배 위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입각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률이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의 입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청문이 무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 기본 기능이 행정부 견제인데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정부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헌법 구조상의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에게 직무 전념 의무가 있습니다. 입각하면 양쪽 모두 직무 전념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법안이나왔을 때도 추진하려고 했던 입장에 있는데, 더구나 다수당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5선 의원이 장관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우리 국회의 위상이 이렇게 무너졌나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회를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21년째 뵙고 있지만 항상 변함없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해 오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 20여 년 동안에도 많은 발전을 해 왔고 또 고비고비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이 민주정을 바로 세우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헌헌법에서부터 내각제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그리고 국무위원을 총리의 제청

에 의해서 임명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각제적인 성격의 국무위원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유독 많아요. 1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없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 몸 가운데 벌레라는 말이지요. 사자는 동물이 무서워서 아무도 범접을 못 하는데 사자가 죽으면 제 몸 안에서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조직의 권위나 이런 걸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고 내부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미리 다 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의원 하실 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보면 자료제출이 매우 부실해요, 사실은.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 국회 스스로가 무력화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정부가 검증하는 서류 이상을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검증하는 서류조차 못 받고 하는 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개인이 청문을 편하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인사청문제도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이시고 또 정부조직, 국무회의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 당에서 장관후보 청문보고서를 한 건도 채택해 줄 수 없다고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 도와주고 문제없는 사람은 빨리 동의를 해야지 왜 그러냐 했더니,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짧아서 내가 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워요. 김민석 총리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전에 돈 받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총리 된 예는 첫 예요, 첫 예.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국무를 총괄하고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누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자라는 사람이 가면 대한민국 총리직이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 보세요. 강선우 여가부장관, 이진숙 교육부총리, 뭐 많습니다. 많은데, 정부기관 장관, 국무위원 자리가 가지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 교육부는 연구윤리, 논문 표절 막는 이런 것이 핵심 가치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약한 사람, 여성, 을의 보호, 평등 유지 이런 것인데 핵심 가치를 침범한 사람들이 그 부처를 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국무위원이 되기도 하고 또 여권에서 책임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자부가 예전에는 내각사무처라는 이름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내각을 통괄하는 것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대사들을 전부 소환했어요. 미국대사부터 일본대사 다 소환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정무직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통치 철학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싶지도 않은데, 나하고 뜻 맞는 사람 쓰는 건 좋은데 아그레망을 받고

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데 가기도 전에 이 중요한 때 주미대사를 철수시키고 이런 것 왜 합니까? 그럴 사정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바로잡아 주세요. 지금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게 국익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풍수해 대책 관련인데 지금 수해 때문에 난리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말기에 풍수해 대책비를 28조 책정했어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84조인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하는 데 22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난리를 쳤어요. 84조는 집행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상이변으로 수해가 나면 소하천이 넘치고 주거지가 침수되지 4대강 본류가 범람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자연화를 하자고 난리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가치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쟁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수사체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수사 권력은 반드시 혼자 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감독 견제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지고 나면 손해는 국민들만 입습니다. 그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주호영 위원** 예, 답변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초대 대법원장이신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좌우명을 제 정치인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공무사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공적으로 일을 하고 사적인 일을 돌보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로 제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주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지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 지방시대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특별법과 균형발전 특별법을 합법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친 그런 상황인데 과하게 균형발전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

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자치분권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균형발전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에 주로 관심을 갖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근본적인 처방은 자치분권제도를 혁신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치분권제도 혁신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이해식 위원**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후보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그 앞에 모니터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를 성취시켰습니다. 그 뒤에 취임하시고 나서 99년도 1월 달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치다운 자치를 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분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그게 참여정부까지 죽 이어졌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잘 아시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 사업들이 추진되지요.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도 죽 진행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나왔고 그때 5+2, 지금의 5국 3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도 시작이 됐던 것인지요.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합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역시 이것도 지방분권을 다루는 위원회였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그대로 계속됐고요. 물론 이름은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바꿨습니다마는 근거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참여정부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됐고요.

그런데 이 두 위원회는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고 분리된 채 왔고 그리고 그 개념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 이질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은 합쳐졌고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분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것을 합쳐진 형태로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저는 그 원칙을 지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거의 70% 가까운 안건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안건을 다뤘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안건은 10%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2개의 가치를 섞으면 예산 투자 중심인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장관 취임을 하신다면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장기적인 과제라 하더라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균형발전 사업은 산자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분권과 관련해서 ‘분권의 가장 핵심 되는 분권은 재정분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이해식 위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것을 기사에서 봤는데 그 소신이 변함없으신 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변함없이 2~3% 인상해 올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지금 19.24%니까 적어도 그러면 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22~23%까지.....

○**이해식 위원** 22~23%까지는 올려 가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자치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것은 헌법 117조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쭉 이렇게, 이 주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 2.0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주민자치와 관련된 소신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만들면서도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못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으로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가 매우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만~3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만이 되어야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공동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우선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 오늘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이런 내용을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조금 피상적이고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숱한 자연 재난에 시달려 온 일본의 시스템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일본은 실시간 재난안전지도 그리고 잠재적 재난위험지도 이 두 가지 툴로 재난정보를 통합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전국 단위 지도에서 해당 지역의 위험 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페이지요.

앞 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 특보, 경보, 주의보 같은 이런 지역 현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번역을 해 놔서 그런 데요, 아이치현이라는 데가 호우, 홍수, 산사태 경보 또 낙뢰, 파도 주의보가 현재 발령 중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밑의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 지역의 단위별, 시간별 예보를 동일 페이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또 시간별, 지역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상청 날씨누리인데요. 여기에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눈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쉽게 볼 수 있는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요.

실제 특보 같은 경우에는 별도 탭으로 들어가 가지고 별도 검색을 해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날씨상황판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기온, 강수, 바람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확대가 안 되고, 들어가서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 산사태 예보시스템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 예보시스템에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다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정보 통합관리가 대국민 전달체계에 좀 개선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실시간 예보가 아니고 잠재적 위험안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좀 더 분명합니다.

이 지도는 일본 국토지리원의 잠재재난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수, 산사태, 폭풍 해일, 쓰나미, 도로 통제 그다음에 지역의 고도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침수지도입니다. 이것은 일본 겁니다. 일반적인 침수지도인데 여기에 더 클릭을 하면 침수에 따른 주택 붕괴와 위험지역이 함께 파악이 되거나 또 들어가면 관심 지역의 침수 그리고 산사태 위험, 그러니까 침수가 됐을 때 산사태 위험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면 대피장소까지, 쓰나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대피장소가 있다 이런 것까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지요.

이게 우리나라 환경부 홍수위험지도인데요. 지금 침수, 산사태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도 매우 단편적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여의도 근처 침수지도, 여의도 근처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침수지도인데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면 어디까지 잠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강수량 기준도 30년, 50년, 80년, 100년, 500년 이런 빈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이 좀 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재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동안에 많이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재난안전행정을 구조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특히 제가 AI 전환, 그러니까 AX를 통한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역시 재난 대비에 있어서도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의지를 제가 잘 알겠고요. 행안부 답변을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셀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재난과 관련된 건데 이게 작년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6월 24일 날 일어난 일인데 작년 9월 달에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방청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25년 하반기에 개정안을—이 개정안은 시행령입니다—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것을 이것 법도 아니고 시행령 고치는 데 지금 2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야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행령 부분 빨리 좀 고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직전 행안부장관께서 12월 초에 사임하고 나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것 좀 쟁겨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이 생기면 소방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방서장이 그 중심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소방서장이…… 이 소방관 계급별 비위·범죄 비율을 보면 소방서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이유를 잘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이 중심인물이잖아요, 어떤 재난이 터졌을 때. 그런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감사합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이런저런 인연도 있었고 또 사회적 경제나 이런 영역에서 문제의식을 비슷하게 많이 공유하시던 분이 제가 일하고 있는 행안위와 같이 파트너가 될 행안부장관으로 오신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야당 위원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으로서 후보자께서 행안부장관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라거나 아니면 재난 대응 이런 분야에 준비가 잘되어 있으신지 정책 역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답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지역 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농어촌주민수당 그리고 햇빛·바람연금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또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자체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정주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지역 사랑상품권을 해당 지역에 방문해 오는 분들에게까지도……

○**용혜인 위원** 열어 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인센티브로 열어 주어서 그 수요를 더 늘릴 수 있고 소비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을 보고 생활인구가 늘어나게 되면民間의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용혜인 위원** 경제도 활성화되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용혜인 위원**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요.

그런데 전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도록 만들어 낸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체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폐널티를 주는 제도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화폐 말살 정책인데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지만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재정을 다 망쳤던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었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악성 포퓰리즘 정책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그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자체들이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보통교부세 감액 폐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보시면 이게 정부 무능으로 인한 가스비 대란 때 민주당 소속의 자체들이 가스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상민 장관이 이런 정책들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폐널티를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직접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폐지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그 합리적 대안의 예시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 할 경우에는 폐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폐널티 자체는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은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답변일까요, 아니면 부처에서 작성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된 그런 상황일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확인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폐널티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합리적인 대안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건지 세입 증대를 통해서 마련했는지 그것을 정부가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저는 지방분권 원칙에 입각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을 중앙정부가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폐널티를 이렇게 부과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사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여러 문제점들은 생략하겠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제대로 검토하신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에 이상민 장관이 만들었던 이 제도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에 관한 질문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다행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도 개정이 되고 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그나마 지역화폐 부활의 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지역화폐 활용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를 보면 정부 지원 예산이 없다 이런 이유로 고양페이 할인율 적용을 7개월 동안 중단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추경안 편성되면서 최근 재개를 했는데 할인율이나 1인당 구매 한도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아주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현금성 복지교부세 폐널티 같은 악성 제도들은 좀 없애고 지역화폐를 오히려 잘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거둔 그런 능력 있는 유능한 지자체들은 오히려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런 부분도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발행금액에 비해서 30%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액이 보통 1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효과를 따지고 보면 30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충분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없애야 되는 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농어촌 주민수당 관련돼서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현재 어쩔 수 없이 농림부 소관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농어촌 주민수당은 사실은 농민에 대한 산업정책 관련된 수당이라기보다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소득 증대 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부 소관으로 맡겨 두지 마시고 국무위원이 되시면 행안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주무부처로서 농어촌 주민수당도 행안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

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 아까 오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후보자로서 생물학적 동일성은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동일성은 갖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나아가서 사회학적 동일성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평소에 온화하시면서 소신과 강단을 갖고 계시는 정신적 동일성 내지는 사회적 동일성을 계속 좀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극한 호우에 따라서 전국에 4명이 사망이 되고 1명이 실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5000여 명이 대피를 하고 있고 중대본은 경보 최상인 심각 단계 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지요, 7월 17일 그때 저녁에 대통령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와 만찬 회동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만찬이라고 보는데 재난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재난 현장이나 아니면 위기관리센터 정도 가셔서 지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대통령께서는 재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차례……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런데 오늘……

○**서범수 위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이 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식으로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리고 나서……

○**서범수 위원**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총리가 거기에 앉아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누가 국민의 안전을 살피겠다는 말입니까? 말로만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 일단 하나. 그러면서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저는 대통령과 같은 파다. 무슨 파인 줄 아시냐’, 무슨 파라고 하셨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현장파라고 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당연히 그러면 그 시각에 현장에 나가 계셔야지요. 현장에 나가 계셔야 현장파로서의 진정성을 보이는데 거기 안 나가, 전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위기관리

센터라도 나가셔야 되는데 현장에도 안 가시고 위기관리센터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오늘 오전에 위기관리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요. 오늘 오전이지요. 그래서 다 지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도 호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맞겠느냐. 2022년 지난 정부 때 일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마침 8월 10일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폭우 피해에 대통령이 자택에 근무, 자택에 있다고 해서 자택이 위기관리센터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이 정신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어제저녁 만찬 회동이 있을 때까지는 행안부장관직무 대행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하고 총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후보자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적어도 최고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그리고 총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앓아서 많은 비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찬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과연 그걸 용납을 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한 10~11개월 정도 남았지요. 그렇지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행안부장관을 디딤돌 삼아서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행안부장관에 임명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출마 안 하신다, 생각이 없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중에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수 있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서범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사실은 정치인 장관도 사퇴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오해하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오히려 정치인 장관을, 특히 선거 관리를 하는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에도 지금 내정을 해서 이런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우려

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국민들께서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잠시 전에 드리려던 말씀입니다만 저는 당내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 지원을 하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엄정 중립을 지킴으로써……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중립 지키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신상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인사 검증 기준이 없지요?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기준 해 가지고 쭉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공표를 한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후보자님은 몇 개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거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음주운전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음주운전은 저희가 15년 전 3회, 10년 전 2회 기준을……

○**서범수 위원** 아니, 그것은 공천의 문제고 음주운전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희가 공천 기준을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을 원용해서 갖다 썼습니다.

○**서범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질서 관련해서, 다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전용차로 위반도 있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암체 짓이거든요, 사실은요. 암체 짓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전용차로 위반이나 장애인주차구역은 후보자님이 직접 운전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셨을 건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간단히 장관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행안부장관으로서의 모두 인사말씀을 죽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빈발하는 사회적 참사 또 대형사고가 많이 빈발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지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지금 행안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이외에 지방행정을 또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또 지방소멸이라든가 다양한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가 굉장히 정부 부처 중에서 중요한, 행안부의 어떤 주요한 고유의 업무인데

점차적으로……

지난 행안부장관의 일정을 죽 보면 재난에 대응하는 시간과 비중이 너무 과중하고 오히려 지금 지방의 어떤 위기 또 민생의 위기 또 지역 간의 격차, 지방소멸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제도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세제 또 지방재정 또 지방경제에까지 전방위에 걸친 지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생지원 소비쿠폰의 경우도 행정안전부가 집행 책임을 맡고 있을 정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책임을 다하는 데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방소멸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지방자치 30주년을 경과한 현재의 지방의 상황은 대단히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또 지방소멸 대응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묻는 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마는 행안부가 지방의 문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문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비중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고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그 내용 중에, 장관후보자의 인사말씀 중에 그런 지방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확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재정분권은 어떤 장관후보자도 매번 반복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이라든가 재정분권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방소비세율도, 배분율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방으로 재정을 확충해 가면서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세 번째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난번 정부의 이상민 장관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을 공언하셨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위원장 신정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상민 장관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교부세율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 지방교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랫동안 19.24%로 고정돼 있는 교부세율을 최소한 22%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22~23까지 올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개선 외에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자치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재정분권 또 권한의 이양 또 입법권의 확대 외에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생산성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량을 좀 더 확대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だ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이번에 내란 사태, 계엄 이후에 헌정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깊게 뿌리 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계엄령이라든가 내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그런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심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민주시민교육 역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주주의를 보다 더 두텁게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국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이력 중에, 경력 중에 지금 국민총행복론을 주장하고 계시는 포럼의 대표로서 활동해 오신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해소 과정에서 사회적갈등 비용이 7년에 무려 300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일부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문제와 우리 지방자치 공간에서 사회적갈등, 각종 사회적인 현안을 풀어내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문제로서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 저의 의견을, 몇 가지 궁금증을 좀 물어봤고요.

이상으로 본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질문을 마쳤는데요 보충질문을 조금 하다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장관님, 앞서 교통법규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수행비서 등 보좌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후보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제가 총체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예,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게…… 제가 자료, 통계를 보니까 국민의힘 전직 장관께서,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님은 5년간 42건, 원희룡 전 장관은 8개월에 20건 이렇게 있던데 이건 다 사소한 부분으로 치부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방금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시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들고.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한남동 관저 유령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 안을 보시면 저게 제가 유령 건물이라고 통칭을 하는 이유가 등기가 안 됐어요, 건물이 지어진 이후로. 아마 후보자께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저는 골프 연습시설이라고 했고 윤석열 정부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창고だ라고 이야기했고요. 경호처 차장은 경호시설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저 건물이 골프 연습시설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라든지 경호처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지요, 후보자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봤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저 공사와 관련해서 경호처가 현대건설에 공사 계약을 맺습니다. 언제 맺느냐하면, 날짜를 잘 봐 주십시오. 7월 7일 날 맺습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초소 조성하고 경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 그리고 왜 이게 행정안전부와 관련이 있는 건지를 제가 지금부터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실제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최근에 제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포르테라인이라는 곳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 기간을 한번 봐 주십시오. 22년 6월 6일 날 공사를 이미 시작했어요. 즉 계약을 맺기 한 달 이전에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공사 내용을 보시면 옥외 휴게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내용상 골프 연습시설이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은 7월 7일 날 이루어진 겁니다.

후보자님,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경비시설이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휴게시설, 즉 골프 연습시설이었어요. 그러면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계약 한 달 전에 현장 시공을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현대건설에 계약을 맺었는데 현대건설에서 포르테라인이라는 데다가 일괄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어림짐작으로도 이 세 가지 법의 협행법 위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한남동 관저 계약의 온전한 책임은 당시에 행안부가 지기로 했던 겁니다. 즉 2022년 9월에 한남동 비서실로, 윤석열 정부 비서실로 권한을 이양하기 전까지는 행안부가 책임지고 이 일을 했던 건데 이 모든 재정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인 사항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감사 결과 세 가지 조치를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하라는 거였고 준공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조치를 하라는 건데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1차 감사원 감사는 최재해 원장이 봐주려고 작정하고 한 감사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2차 감사가 들어갑니다. 2차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봐주려고 했던 그 1차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도 아직도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것이라고는 해당 지자체와 경찰에 사건을 의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진상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건 행안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아까 오전 질의한 것에서 조금 연이어서……

아까 AI디지털혁신부 같은 부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컨트롤타워를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해 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국무 위원이 되신다면 이런 의견을 얼마든지 국무회의에서 개진할 수 있고 또 행안부가 조직

이라든가 공무원 숫자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장관님께서 모두발언에서 AI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과기정통부라든가 유관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AI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 기능을 기재부가 쥐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 기재부도 물론 어렵겠지요. 그런데 특히 AI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기능까지 주무부처한테 주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기본적으로 예산 요청을 부처가 하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하는 예산 중에 AI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도록 행안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진 위원** 꼭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또 그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발주처가 돼서 직접 그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리고 AI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AI 세이프티, 안전 문제만 강조가 되다가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모든 유럽 국가들도……

AI가 안보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ETRI 산하에 AI안전연구소가 사실은 숫자도 굉장히 적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과기정통부에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특히 숫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위원** 지난 5월에 언론보도,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어머니가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 데리러 군부대 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과문해서 처음 듣습니다.

○**고동진 위원** 언론보도가 지난 5월에 됐는데 이게 휴가 나온 아들 피업하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음주운전 분야를 관할하는 경찰청이 행안부장관 소속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그래서 이게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5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난 5년간, 2020년에서 2024년 1004명입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사망 사고가. 그다음에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년 40%입니다. 이게 습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옛날에 음주운전 한 번 한 것 아까 사과를 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아무리 많이 해도 면허정지 후에 1년에서 5년 지나면 면허증 다시 재발급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오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그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자.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경우, 상해나 중상해가 아닐 경우는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도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음주운전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은 생계형이 많다라고 여태까지 좀 관대한 게 있었는데 사망 사고나 중상해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제2의 IMF 위기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정치·경제·민생 등 모든 국정 영역에서 총체적 실패가 낳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린 점에서 후보자께서 과거 코로나 시국 당시에 여당의 그 당시 원내대표였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난 극복을 위한 주요 조치와 성과가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긴급여신지원기구, 한국은행법을 발의하시고 감염병 대비 방역 조치의 손실보상,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세 번이나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소상공인 보상법도 만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의 초유의 사태, 코로나 사태에서의 어려움에 신속히 응답한 그리고 민생 현장의 생명줄 같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경제 활성화의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성장률이 지금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은 1%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런 원인의 대부분이 물론 수출 부문에서의 흑자 감소에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내수 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을 벼티게 해 주는 방법은 내수를 살리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수 살리기에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이 소비쿠폰은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 소비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 소비를 특허나 각 주거 지역, 자기가 주거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소비를하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지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께서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되잖아요. 그 부분은 잘 진행해 주셔서 소비쿠폰 정책이 민생에 확실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채현일 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40도 폭염에 의해서 또 극한 호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400mm 이상 쏟아지고 있고 최근 3년간 이런 것이 서른한 번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는 태풍 때나 이렇게 극한 호우가 왔는데 일상화, 연례행사가 됐고 뉴 노멀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기후 재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청 같은 경우는 시간당 80mm 이상 극한 호우에 대해서 예보가 났고 실제로 왔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수 인프라가 받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30년 전 기준으로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대응 중심의 방재가 아니라 과거의 예측치를 넘어 비가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제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40년 이상의 노후 인프라를 전수조사하고 전면적으로 SOC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것은 국토부와 또 행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기후위기에 맞춰 가지고 하수도, 우수관, 제방 등을 전면적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향후에 재난안전의 총괄 부서로서 행안부가 이 역할을 좀 진두지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미중유의 자연재해가 거듭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 기준도 강화해서…… 지금 50년 주기 재난시설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재난시설에 대한 보수에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이번에는 좀 속도감 있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 고양갑 대학생위원회 장민수 위원장이 저한테 제보를 해 준 건데—대학생인데요—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민주당 해산 집회를 주최하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전파하고 심지어 리박스 쿨파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단체인 트루스포럼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의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 김성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보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학생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보면 통일건국 청년단 해서 행정안전부가 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지원이 있었더군요. 사단법인 대한민국통일건국회에다가 24년에는 3400만 원, 25년에 3200만 원을 지원했고……

그런데 이 건국회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윤석열이 전면에 나섰던 트루스포럼하고 같이 국토대장정을 공동 주최했고, 최근에 모스탄이 서울대 앞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다가 나가서 했던 그 뉴스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김성희 위원** 이 행사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친일, 독재 미화하는 뉴라이트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 옹호하는 단체에 협세를 지원하는 일 이거 가능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행안부는 후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단체는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후원을 표시했다라는 입장인 걸 확인했습니다. 지원 경위, 후원 표시 책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루스포럼에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희 위원** 다음번 전체회의 1시간 전에 국장이, 이거 결재했던 과장들 다 저희 의원실로 와서 저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제고라는 명목하에 감시해서 당시에 본인들에게 마음에 안 들었던 단체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하고 또 거꾸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좀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후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맨홀 뚜껑 얘기입니다.

물 폭탄으로 인해서 지금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 각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비 많이 오면 맨홀 뚜껑이 열려서 시민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강남역 일대에 집중호우 벌어졌을 때 맨홀에 남매가 빠져서 숨진 비극적인 사건,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김성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PPT 보시면 나오지만 이 노란색으로 해서 맨홀 뚜껑 추락방지시설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서 같은 해 22년 11월에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을 의무화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벌어졌습니다. 25년 6월에 부산 연제구에 보니까 맨홀 추락 사고

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연제구에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연제구에서…… 연제구 전체가 아닙니다. 연제구에서 상습침수구역 내에서 설치율이 고작 5.66%예요.

전국 통계도 없어서 저희 의원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군구 중에서 맨홀 뚜껑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을 보시면요,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린 지역만 본 겁니다. 경기도, 충남, 충북 어디 할 것 없이 빨간 것 죽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에서, 0%대도 많이 있습니다. 설치율 20% 미만인 지역에서만 추출했는데 지금 보면 빨간색이 10% 미만인 지역들인 겁니다.

이것 문제가 아주 큰데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김성희 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지금 전국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에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건 9.3%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중점관리구역을 따져도 2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226개 중에서 0%대인 곳이 무려 18곳입니다. 경기도, 부산, 전남, 인천, 전북 할 것 없이 다들 있습니다. 5% 미만이 35곳, 50% 이상인 곳은 76곳밖에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설치율이 낮은 것은 전액 지방비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 간의 차이가 극심한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비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재난안전 총괄을 행안부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할 건지, 안 할 거면 강제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안부에서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후보자님, 노근리 사건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것이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서 희생된 건데,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개정안이, 보상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 돼 있는데 장관이 되시면 개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소멸위기 대책들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 인구 감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존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감소는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감소 속도가 가파른 그런 지역들이 더 많은데 그런 쪽에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9개 지역은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감소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정 확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우려를 낳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감소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으로부터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이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수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에도 기금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률이 낮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지, 후보자님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주로 시설 위주의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전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설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보다 더 높이려면 그런 시설 위주의 지원보다는 보다 더 인구를 유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그런 사업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하여간 어쨌든 이것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꼭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저희 행안위 위원님들 지역이 어디인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유일하게 인구소멸지역의, 관심지역 말고 소멸지역 출신 위원님이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해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펀드 조성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펀드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이 되시면 바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시잖아요, 후보님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설에 의하면 경기도지사에 나오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사 나오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보통 행안부를 선거 주무부처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주무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고요. 선거 지원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지원 업무를 하다가 선수가 되는 것을 과연 야당에서 공정하다고 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적절히 고려해서……

○**박덕흠 위원** 야당보다도 여당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장관후보자님, 간편결제 사용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오래돼서 제가, 간편결제는 해 봤습니다마는……

○**모경종 위원** 딱히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으시나 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모경종 위원** 요즘 젊은이들은 간편결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편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금융업, 이른바 페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참 좋은 경우가 많은데 현재 행정안전부가 그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기존의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행안부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간편결제들을 쓸 수 있는 전자금융업 이곳에는 아직 행안부가 이 시스템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게 금융권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자금융법입니까? 전자금융산업법인가요? 거기에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게 추가적인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비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금융업을 통한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방하면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모경종 위원** 행정안전부가 전체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해야 되기도 하지만 부처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복지로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고용서비스 관련된 홈페이지들도 있습니다. 정부24라는 홈페이지가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처별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은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활용한 정보 서비스를 더욱더 활용하시려면 이 지점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들이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모든 부처에 있는 행정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것에 가장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X, AI로의 전환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분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혜택, 정책적인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부24가 됐든 정부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스스로 확인하고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편의적인 AI 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도해서 전체 통합적인 AI 정부를 만드는 데 주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우리 정부가 AI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AI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 현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인근에 있는 청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너무 심하게 났던 적도 있고 여러 재난 현장들이 있는데, 저희체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경찰하고 소방이 함께 출동을 해서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경찰과 소방의 직급체계가 불일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경찰은 치안정감, 소방은 소방감 이런 직급체계 불일치로 인해서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움직임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 광주, 경기 북부, 제주, 다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 조직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의 조금 더 유연성 있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도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이, 그러니까 재난에 소방청과 소방서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런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 청문회면 괜찮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다른 청문회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달희 위원** 아니, 많이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갑을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 금융기관 중에 유일하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입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잘 못 하나 봐요. 최근 들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고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누가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에 청년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새마을금고와 연루된 피해자들이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2023년에 비해서 작년에 액수로는 3배, 건수로는 31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법인 형태의 서민들을 위한 상호금융기관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과거 5년, 길게는 한 7년 정도 기간 동안에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기업금융 내지는 PF 대출 이런 쪽에 집중해서 영역을 넓혀 와서 그 부분에 상당한 부실이……

○**박정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취약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도 지금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정현 위원** 어떤 대책을 구상하실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우선 첫째는 서민금융으로서의 원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업 대출의 비중을 현재 절반 정도까지 늘어 있는 것을 당초의, 한 7년 전 수준인 20% 선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종사자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공동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공동체와의 결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서민들의 가계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 또 정신 무장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다잡고 새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도 필요하고 실제로 행안부 안에 금융과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적인 부분들도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새마을금고 초기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상호부조 정신, 서민금융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융위원회로 가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원래 갖고 있던 정신과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월에 지역경제지원국장에게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함께하자고 내용을 내라 이렇게 했더니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할 테니까 장관으로 들어가시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사실 오전에 조금 후보자님 입장이 난처하실까 봐 직설적으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오전의 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후보자님은 당직자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의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5선 의원이시고 비대위원장은 하셨고 이제 국무위원후보자 지명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지금 보좌진들 갑질 문제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질타가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회 보좌진들의 상처가 가장 크고 거기에 열매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책임으로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진보 또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PC라고 폴리티컬 커렉트니스(political correctness)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보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시는데요, 동료 의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인사권자가 계신 사안인 만큼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예, 입장 이해하고요. 그러나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지금 진보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차제에 그 정치적 부담은 공유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이 됐는데 행안부장관후보자시니까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해서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옛날 선현들이 이런 말씀 하셔서 저는 깊이 기억합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할 때 일은 된다.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고 바쁘시고 하겠지만 세금 체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안 내서 압류도 수차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질서 유지에 관여돼 있는 행안부장관후보자시니까 사과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오점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구석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항상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점을 더 깊이 생각해서 더 노력하고 더 가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행정부는 입법된 법의 집행자입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 질서 위반 사실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장 표명 내지는 사과를 통해서 법 집행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제가 장남 전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가족관계 속에서 전세 입주하고 계신 것 같던데 중여세 문제는 없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중여가 아니고요. 누구로부터의 중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박수민 위원** 아니, 고액 전월세를 이용해서 불법 중여한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적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등등 하는데 중여세…… 그러니까 전세금을 주고, 가족관계를 통한 좀 저렴한 전세를 하게 되면 그게 중여 의제가 됩니다, 세법상. 그래서 그 혜택을 받게 되면 중여세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리스크가 없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중여에까지 이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들의 회사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연구소가 대전에 있다가 서울 마곡으로 이전을 하면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

○**박수민 위원** 전세금이 정상 가격으로 산정됐습니까? 그러기만 하시면 돼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상 가격으로 산정됐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부분은 자료를 뭘로……

○**박수민 위원** 전세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입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4억 5000 정도의, 4억 5500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시세로 보면 아마도 한 5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꼭 좀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후보자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보상법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 법에 보면 피해 보상의 의미가 적극적 손실, 소극적 손실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에 정신적 손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위자료라 그러지요. 그런데 위자료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상심의에 동의하면, 적극적·소극적 손실에 동의하면 위자료까지 포함된 걸로 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 규정이었는데 2021년 이 규정이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이제는 5·18 피해자들이 적극적·소극적 손실 외에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위헌 규정에 의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1년의 법 개정으로 그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해직자 또 무죄, 면소, 공소기각, 연행·연금된 자들도 5·18 피해자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똑같이 소멸시효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멸시효를 배제시키는 법을 발의했어요.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이 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대한 법률 발의를 했는데 2024년 11월 28일에 제가 법을 발의했어요. 우리 행안위 소속입니다. 이게 법안1소위입니다. 그런데 회부만 되고 아직 상정이 안 됐어요. 저는 이걸 여야 위원님들이 동의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정부 측 의견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3년이라는 기간이 소멸시효로서는 매우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신 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부분 이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부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및 발행 규모라고 돼 있습니다. 보면 국비 예산 규모는 2021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76% 감소했어요, 2021년에 비해서. 표에 화살표가 내려오지요. 총발행 규모도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2021년에 비해서 2024년 예산이 76% 감소했는데 발행 규모는 26% 감소했어요. 매우 적게 감소했지요. 왜 이렇게 적게 감소했나? 지자체 발행 규모가 예산은 76% 감소했는데 2.43배가 증가했어요, 2021년에 비해서. 이 통계치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겁

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은 예산으로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나 또한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속가능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 봅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세미나·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기금을 만들어 보자. 기금을 만들어보면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이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가 있고 또한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자는 안을 냈고 제가 그때 세미나에서 나왔던 여러 자료를 행안부 현 차관한테 줬습니다, 잘 검토해 보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아직 장관이 안 되셨으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아닙니다. 위원님이 법안 제출을 하셨고 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여야 정당의 차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차등해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면 많이 발행한 것으로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 없이……

○**양부남 위원** 더 적극적으로 여야 없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여야 없이 발행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회가 이것을 기금화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기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제가 행안부 차관에게 책자를 드렸으니까 장관님 한번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내용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느냐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 달성을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 이행률이 두 가지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검 지표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실적이라든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라든가 민간 에너지효율 향상 또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 RE100 산단 운영, 학교 등의 에너지 보급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평가 문제인데요.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합동평가를 하게 되면 시도별로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주고 있는데 여기 항목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되어진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평가의 비중을 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통령님께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산업에 대한 육성,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해 주시고요.

하나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28℃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2010년도에 산업부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내 냉방 온도를 28℃로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은 가급적이면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피크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는 냉방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업무 효율이 높지 않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실내온도 관리가 관련되어진 산업보건안전기준에 보면 26℃에서 ±2℃, 미국냉난방협회에서는 23~26℃ 그다음에 ISO에서는 22~26℃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연구한 결과 25~26℃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고요. 지금은 태양광 보급률이 많이 높아져서 전체 전력 발전량의 9%가 되고 있어서 여름철 한낮의 날씨에는 발전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처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진 거거든요. 수요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막고 있어서 사실상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도 어려워지고 또 공무원들도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이 지점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청사들의 냉방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력 예비율이나 업무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8℃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습도가 한 60% 정도 되면요 써서 실제 일 안 하고 공직자들이 밖으로 나가고요 커피 마시러 나가고, 약속 있다고 해서 커피숍에 가고 실제 업무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력 생산을 연료로 할 때,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로 할 때는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그 시기대에, 피크타임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원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에, 2026년도에는 준비하셔서 시범 실시하시고 2028년 정도에 본격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주도

외에도 강원도와 전북이 특별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후보님께서 수도권에서만 생활하시고 활동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권한 이양이라든가 지방재정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달희 위원** 현장감을 좀 살리셔서 확실한 실행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전체 회의나 이럴 때는 대구·경북 시도 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다가올 가장 큰 국제행사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APEC 행사입니다.

○**이달희 위원** 경주 APEC은 저도 부지사로 있으면서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터라 굉장히 남다른 행사입니다.

APEC 개최지 선정이 작년 6월 말에 됐습니다. 아주 늦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국가적인 혼란도 있고 그래서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행안부하고 잘 협력해서 준비가 잘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신께서 가장 호스트니까 또 관심도 많이 주시고.

준비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APEC의 준비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도 아니고요 국가 사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국가 행사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전체 주무부서는 외교부인데 그래도 정상회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안보, 경비라든가 자원봉사 이렇게 우리 행안부가 할 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동안, 작년 하반기에 APEC을 경주에 지정하고 난 뒤에 행안부가 급하게 특별교부세 135억을 내려보내서 기본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큰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행안부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게, 행안부가 지원해야 될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APEC이 주요 국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하고 국비 매칭이 5 대 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통상 국민들께서 이것 국가 행사고 준비위원회가 국무총

리면 국가에서 다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재정이 5 대 5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겠지요.

그래서 한류 문화를 선보이기 위한 전시장 건립 사업비 109억 원 그리고 정상회의 개최 장소 화백컨벤션센터 경관 조명사업 65억 원, APEC KOREA 기념 공원 조성사업 36 억 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매칭이 되어 있지만 6월 말에 전국적으로 특교 세를 신청할 때 경주시와 경북이 이 부분을 신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최초의 국제 행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작년에 특교가 내려간 것 외에도 올해 1차 추경에서도……

○**이달희 위원** 2차 추경은 홍보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2차 추경은 아니고요 1차 추경.

○**이달희 위원** 조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2차 추경 말고 1차 추경에서 많이 보내 드렸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가 행안부의 소관 업무인데요. 한 2만 명이 동시에 오고 그러면 통역이라든가 국제 매너가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지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또 우리 전 국민이 나서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자체하고 맞들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공기를 맞추려다 보면 풍수해도 있지만 또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꼭 현장에 방문하셔서 격려, 지원해 주시면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행사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에 굉장히 식견이 높으시고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전에도 당의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추진했던 그런 기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그 결과로 저는 소수정당의 출현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됐을 때는 총선에서 그런 기여를 하셨다면 이제 행안부장관이 되셨으니까 그런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소수정당들이 지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방의회 선거제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나 4인 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관찰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구 책정 시 저희 행안부의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뒤로부터는 선관위와 또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서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춘생 위원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단독 출마해서 무투표 당선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493명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전과 후보도 굉장히 많고 유권자의 제대로 된 평가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 비율을 보면 거대 양당, 즉 민주당, 국민의힘이 93.6%를 차지했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같은 소수정당에서는 0.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아까 시범사업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미미한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3.7%의 소수정당 당선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2인 선거구제 없이 4인, 5인 선거구제로 가서 소수정당의 출현을 보장하는 것이 저는 지역 정치에 맞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가 모두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모든 여론들을 다 흡수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요. 지역마다 정책적 수요가 다른데 이것이 양 진영의 논리로 간다면 같은 정책이어도 A라는 정당의 주장은 B가 반대하고 이런 걸로는 저는 한 발짝도, 지금 지방자치 시작된 지 30년이 넘어가는데요, 한 발짝도 진전이 없을 거라고 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도 정춘생 위원님의 견해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다는 안 되더라도 단체장 아니면 기초가 안 되면 광역단체장만이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이…… 왜냐하면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특정 지역에서는 이삼십 퍼센트의 득표율로 단체장이 나오면 유권자 수용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결선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도 법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당, 당정 협의할 때도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국회의원도 결선투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한번 힘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한국사회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망국 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방 지역균형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행정안전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선도하는 부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공공기관 지방으로의 이전이라든지 또 이번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을 해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도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보시면 첫 번째, 다행스럽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부산과 울산, 경남까지 포함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와 기능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지금 내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연관성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은 이렇게 내세웠는데 해수부가 우리 정부 예산 중에서 부처로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거기까지는……

**○이성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1%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해수부만으로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고. 부산만 보더라도 해운대구가 구청 직원이 700명이 넘습니다. 해수부 직원 몇 명인가 아시지요? 이전해야 될 대상이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청 하나 옮기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

그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부산 지역의 산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과 관련해서 부울경 지역이 지역별 매출로 보면 83.2% 그리고 지역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76.1% 그리고 지역별 인력 규모를 보면 80.9%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선·해양 플랜트는 부울경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그 산업을 받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기능으로서의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겨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기능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똑같습니다.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전국의 조선·해양 산업의 기자재 업체 비중을 보면 부울경에 79.4%가 다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산으로 해수부를 이전한다면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을 해수부에 같이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산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하고 연계를 시키면 이전을, 업무와 관련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아마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아무래도 지금 후보자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점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적극적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형태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 해양수산부입니다. 지금 해수부는 단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시대에 기후환경에 맞춰서 식량자원으로서 수산 분야가 갈수록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또 현장의 목소리로 봤을 때는 해수부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서 수산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이 점도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한 견해까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중략하고요,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 말씀인지 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대형 참사 유족분들 만나셔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맞습니다.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다른 참사와 다르게 그 오송참사에서는 생존한 사람들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열여섯 분도 트라우마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에도 함께 참여하거나 이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어떠한 조치나 혹은 이런 자리에 불림을 받거나 할 때도 늘 배제가 되어서 그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세월호참사나 이태원참사나 12·29여객기참사나 오송참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국가나 정부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여객기참사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참사 사건은 현장에서도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오송참사 2주기였거든요. 그나마 대통령께서 유족들을 직접 위로해 주시고 직접 꽃다발까지 보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이 오송참사와 관련돼서 8개 기관과 관계자 43명이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요.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만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행복청장이나 청주시장은 아직도 1심 재판 중입니다. 수사 당국은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추모기간을 지정하면서 술자리도 좀 자제하고 전체적으로 추모와 묵념하는 시간을 갖자고 김영환 지사가 얘기를 해 놓고 정작 본인은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결국은 유가족과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여야 188명의 국회의원 제안으로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발의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임에도 지난 정부 국조실과 검찰조사는 침수의 원인보다는 붕괴와 침수 현상 자체에만 치중을 했다. 또한 참사의 원인이나 지휘 책임을 밝히기보다는 하위직이나 실무자 중심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세 번째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나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모든 사고의 대책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상조사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후에 사법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점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조사는 국회

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일이라 만약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행안부로서 모든 자료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행안부의 재난안전팀과 작년에 한번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안전바나 이런 거를 촘촘하게 다시 재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900여 개의 지하차도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여 개가 현장과, 오송의 궁평2지하차도와 같은 식의 조치를 다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조치와 함께 행안부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후보자님, 최근 AI가 대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후보자님도 지명하신 후에 6월 30일 그때 첫 출근 하시면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보도에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AI 정부의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력이나 예산 이런 걸 얼마나 가지고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니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인력은 최근 3년 전부터 AI 관련 공무원들을 공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니까 3년간 합쳐 봐도 한 100명 정도, 이분들이 다 전 부처로 배치를 받는 겁니다. 시험과목도 실무능력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고 특히나 고위직들이, 사무관도 상당히 중간직이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상당한 고위직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대통령실에 AI수석이 네이버에서 아주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그다음에 공공데이터국장 이분들 이력서를 보니까 행안부 내에서는 그래도 관련 학위도 있고 가장 적임자가 배치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기왕 하려면 민간의 혁신적인 역량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고위직 출신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봄을 일으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 또 예산도 보니까, 지금 이거는 행안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2개 사업,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 해 가지고 53억 그다음에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4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전자정부 예산이 한 100억에 못 미치는데요. 예산도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산은, 사업도 그렇고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정부는 저희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전자정부를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정부에서도 조금 늦었지만 바로 추월을 해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지금 AI 정부는 제가 볼 때는 3~4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의 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꼭 최고의 AI 정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어제인가요? AI4 회의라고 해 가지고 금융계의 F4에 해당하는 AI4. 기획재정부, 과기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뉴스에 떴는데요. 이것은 AI 정부하고 좀 다른 AI 산업 육성에 관련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안전부에서도 AI 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 공약사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뭘 빨리하고 싶으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AI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데이터 콘텐츠가 필요한데 공공데이터를 많이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총리실로 갔지만 올 초에, 1월 13일 날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또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드론이나 자율주행 이게 중국 쪽이 굉장히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데이터 개방이나 데이터 관련 규제가 조금 더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저는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인 데이터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고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틱 100을 선정해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보통 행정안전부, 특히 공무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든 통계든 뭐든지 간에 안 내놓으려는 습성이 있고 일단 이렇게 겉으로는 공표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체질상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안부가 선거 관리 주무부처라고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선거 관리는 아니고 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원을 하는데 예전까지는 전부 선거 관리 주무부처라고 그렇게 이야기

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선거 관리의 주체인데 직원이 전체가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일반행정 직원들 빼면 선거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2000여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국 단위 선거 때 설치되는 투표소가 1만 5000곳이 넘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한 사람이 투표소 일곱 군데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거 관리 요원들은 지자체에서 전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선거 관리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전부 선관위 책임으로 돌리고 이러는데 우선 선거 때 교육훈련을 시켜서 선거 업무를 맡기지만 그 교육이 1회에 그치고 이렇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선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주장이나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는 허위사실로 과한 것도 있지만 선거관리 당국이 빌미를 제공한 부실 관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행안부장관하고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에게 말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믿지 못하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중앙선관위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또 아예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인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호영 위원**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우리가 갑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약한 사람을 팁박하거나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주호영 위원**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걸 시정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라가 갑질을 하면 이거 누가 고쳐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국회에서 막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영 위원** 고쳐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주호영 위원** 군사공항들이 지방에, 도심 안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주, 대구, 수원인데요. 이게 지금 군사공항, 국가시설 아닙니까? 국가가 옮겨야 되는데 소리 시끄럽고 불편하면 지방 자체가 공항을 어디 옮겨 주고 그 땅을 팔아서 가져가

라, 이런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니에요, 나랏일이에요. 그다음에 옮겨서 군부대를 새로 짓는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낡은 군부대인데 최신 시설을 요구해요. ‘싫으면 치워라. 우리는 빨리 안 가고 도심에 있으면 좋다’ 이 갑질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주호영 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이것 저희들이 문제 제기할 테니까 국가가 갑질하는 일을 좀 막아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메가시티 관련 서면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대로는 소멸하는 도시가 많고 기존 제도를 바꿔서 좀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메가시티, 시군 통합, 시도 통합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진전이 많이 된 것이 대구·경북 통합이에요. 만약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도 그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체돼 있는데 대구·경북 통합이 입법조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적극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5극 3특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5극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충남도 추진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세종·충북까지를 포괄한 특별자치기구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부산·울산……

○**주호영 위원** 적극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법적인 근거 마련을 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나머지 질문을 안 할 테니까 한 30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답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호영 위원** 아닙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지금 특검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검사 120명이면 지청 2~3개 합친, 검찰청 2~3개 합친 것보다 더 큩니다. 검찰은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검을 남용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건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저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문제 있으면 그것보다 더 심한 방식을 자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권이 조정되면 특검제도는 남아 있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특검제도는 남아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주호영 위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특검제도를 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신정훈 위원장, 서범수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검찰이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사를 제대로 해 왔다면 특검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수사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국가기관이 모든 역할을 성실히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특별검사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시간이 짧아서 더 토론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야기 좀 더 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위원장대리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해식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일순간 후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질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내란 과정에서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분권하는 것이다,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래서 앞서 질문에 이어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에 그때 새로 들어간 조항—빨간 글씨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원래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운영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런 것만 돼 있었는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다룬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원래 2개 조항이었는데 1항을 포함시켰습니다. 1항의 내용을 보면—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이것을 자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은, 이 1항은 주민은 주민자치 권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꽂피우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인데 이 전부개정해 놓고 그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방자치법이 혹시 몇 년도에 생긴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 기억으로는 49년 아닙니까?

○**이해식 위원** 맞습니다.

제헌헌법을, 어제가 제헌절이었습니다마는 헌법을 공포하고 난 1년 뒤에 49년 7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49년 처음 지방자치법의 1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이때는 주민의 자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시·읍·면장을 직선으로 뽑았고 동·이장까지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도 있었고 또 군수도 있었지만 그건 임명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뿌리 단위에서 직선을 한 것이지요. 동장·이장까지도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독재 그리고 군부독재를 경과하면서 이 지방자치법이 상층 단위의 이런 시장·군수·구청장, 특·광역·도지사 이런 자치로 바뀐 거지요. 저는 원래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의 자치를 어떻게 꽂피우느냐 이것이 최대의 과제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함께 어떻게 이 주민자치를 내실화할 것인지 행안부에서 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런 걸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주민자치를 꽂피우고 또 법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옛날의 모습을 되찾을지…… 저는 사실은 지금 동장·면장 직선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는 오래전부터 노자의 소국안민 사상이 참 맞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단위에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에 참여할 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지방자치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 단위의,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활발하게 주민들에 의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관련한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야당이 검수완박법이다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검수완박법이 잘못됐으니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하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든 것도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권칠승 위원 저는 이게 법체계를 무시한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검수원복이 아니라 검찰청법을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법이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글자 '등' 자 한 자를 이용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서범수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국 설치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 지금 대선공약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를 할 계획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칠승 위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비대화 우려를 많이 하셔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인 실시……

○권칠승 위원 그래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도 안 들어야 되고 또 권력으로부터 중립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동시에 또 스스로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제어 장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대해지는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를 지금과 같은 일원화 체제에서 이원화 체제로 그리고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수사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하여튼 적절하고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으면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지난 정부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인데 그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도 상당히 많았고 또 이태원참사 1심 판결문에 보면 이게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는 그

런 내용들이 좀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정부부처 내에서 주무부처이기도 하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청와대로 원복을 할 때 행안부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하시고 법적이나,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관행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서 졸속 이전이라는 말이 없고 그다음에 또 후유증도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이전이 졸속적일 뿐만 아니라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 행안부의 청사 관리 부서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을 추진한 대통령실 측에서 너무 사실상……

○**권칠승 위원** 무슨 말씀인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권한을 모두 행사해서 역할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내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장관 취임하시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행안부 직원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잘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후보자님,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께서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로서도 참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던 이전의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하고 유가족들의 여러 요구들을 현실로 만드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장관으로서 반드시 이루어 내셔야 하는 여러 가지 재난안전 분야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언급을 하셨던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안전사회 건설에 꼭 필요한 법안이고 후보자께서도 장관으로서 추진할 중점 과제로 뽑아 주셨는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예, 물론 법안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그 법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함께 철저하게 해 주셔야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지 벌써 10년 정도가 됐고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정부의 책

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생명안전포럼에서 이 생명안전기본법을 발의하면서 부처와 함께 미팅을 하자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오셔 가지고 그냥 듣고만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있고.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고민하기는커녕 추상적인 방향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당시에 행안부가.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재명 정부의 행안부는 그런 일이,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의 준비 상황도 국회의 논의 상황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 밝혀 주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에 독립적인 재난 원인 조사기구도 포함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포함돼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서면 질의에서 국가 주도의 참사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 ‘재난 원인 조사는 소관 부처의 몫이고 재난 조사기구 설립은 고려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미온적인 답변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도 그리고 오송 참사도 재난 원인 조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하면 된다가 아니라 소관 부처가 사실 있어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원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오송 참사 같은 경우도 주무부처 지정 안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다만 사고 조사, 특히 항공기 사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를 공신력 있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조사 외에 나머지 부분의 조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혜인 위원** 국제적인 항공 사고 조사에 대한 기준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한정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난 원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 내용에 독립적인 재난 조사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굉장히 빨 빠르게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발표에 의해서 2차 가해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그걸 지적을 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행안위에 있으면서 지적을 했었고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행안부에서 늘 ‘검토하겠다’라고 말만 이야기하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들이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2차 가해 전담 수사 조직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미 벌어진 2차 가해를 염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가해를 예방하는 것도 저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난 피해자 지원의 전 과정을 하던 대로,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검토하셔서 이재명 정부의 피해자 지원은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과정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새롭게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 오늘 이 청문 과정을 쭉 들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저희들 228개 지역구 중에서 89개 정도가 지금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제 지역구도, 익산도 도농복합도시인데 면 단위에 들어가면 학교가 비어 있고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난 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다는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유출이 되고 있고요 거의 일상이 사라질 위기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장관님 되시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 상황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 폭염,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과연 나라가 우리를 지켜 줄 수 있을지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시대에 행안부장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후보자님께서 가장 장점이 국회와 정부를 아우르는 조정 능력이 있으시고 소통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아마 여야 위원들이 함께 다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각별하다는 거 꼭 생각을 해 주셔서 국회와 정부, 조정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

또 후보자님 보면 이게 저희들이……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한번 좀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께서도 전에 의정을 하실 때 보면 저출생, 인구소멸에 대한 관심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 부처 간의 문제거든요, 행안부장관님.

그래서 과거에 해 왔던 경험과 이 국가 위기, 저출생,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사실 인구감소지역이라고도 하고 지역소멸, 그러니까 지역소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의 차원에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인구감소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래서 출산율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인구밀집지역 그 다음에 주거비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일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리고 출생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구소멸지역,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인구소멸지역의 인구 비중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인구위기의 출생률을 높이는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인구 정책 전체의 측면에서 인구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면을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가운데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중의 한 부분이 저희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책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역량을 모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책을, 전 정부의 각 부처 모두가 모여서 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출생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대책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위기를 지역소멸 극복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관련 학생들을 자제시키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라고 답면서, 서면답변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글쎄요……

○서법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본 것만 다는 아닐 것 같고요. 4명에 대해서 다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서법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 판결문을 찬찬히 한번 읽어 봤거든요, 이 판결문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도 보니까 한 17~18명, 20명 정도의 가해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공소외……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것은 그렇게 조사되고, 그러니까 기소장에 공소외로 라도 올라간 사람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서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중에 두 사람은 징역 1년, 두 사람은 징역 10월, 그중에, 10월 두 사람 중의 한 분이 후보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서법수 위원 과연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자제시켰고 수습하려고 했는데 이 징역 10월이라는 게 해당하기나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춘생 위원 그 당시는 증거 조작, 증언 조작 다 있었어요. 그 판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것은 뭐 제가……

○서법수 위원 아니아니, 여기 다 있잖아요.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잠시만 계셔 보세요,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 그 당시는 증거 조작 다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양형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리고 잠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래서 10개월, 1년보다는 그 법에 따라서 정말 폭행한 것이 인정됐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형을 받았어야 합니다.

○서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달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자백을 강요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판결문에 있던데요. 있던데,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법수 위원 아마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활동 하고 이 사건 갖고 받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서법수 위원 저희들이 민주화운동백서에 보면 후보자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PT를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관요원으로 인식된 외부인의 감금 및 조사에 관여한 사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감금 및 조사에 관여한 사실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문에도 그렇고요 저기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것은 관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감금돼서 조사받던 피조사자들을, 외부인을 가족 그리고 학교 당국에 인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여자, 관여한 것이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판결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관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재심을 청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김재규 사건, 납북어민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안 해 보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으로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지금까지 후보자님은 ‘그와 관련된 학생들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했지 후보자님께서 그런그런 일로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고 한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와 같은 사과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리고 그 당시 재판정에서도……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그 이후에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이후에 피해자들하고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이후에 전혀 만나 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라기보다는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한 번쯤은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번쯤 그때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말씀을 주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차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저도 한 3분만 더 몇 가지 지적하고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선관위, 선거 관리의 주무부처 내지는 지원 부처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안부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동되고 또 내란 사태로 판명되면서, 규명되면서 지금 정권이 갈리고 이제 이런 불법 계엄이 소위 말해서…… 아니, 부정선거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거리에 나붙어 있는 플래카드를 좀 보시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전히 지금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 내지는 ‘중국인이 투표한 이재명 당선무효’, ‘중국 공산당 한국 선거 개입’ 이런 플래카드가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거의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소위 말해서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한 전한길 씨라든가 미국계 한국인입니까, 모스 탄이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중국계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중국계입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가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의 선거 제도, 민주주의 제도를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선관위의 업무임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인 선거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제도의 신뢰를 깨뜨리려는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나름 엄정하게 대처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통령 파면의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논리였고요. 또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여기에 따르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잣아들 걸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또 연결돼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오산시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 대회를 개최한다는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윤석열이라든가 모스 탄 그리고 전한길 이 등등등이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이런 사실과도 명백히 다르고 또 부적절해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오산시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회를 다음 19일 날, 토요일 날 개최하기로 돼 있답니다, 150명을 상대로 해서요, 50개 팀.

지금 오산시가 이번에 안전사고 때문에 아주 뉴스에 집중 부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오산시인데요. 이런 정치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산시의 행정이 지금 적절한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처를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공론에 의해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내심도 있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공론을 해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께서도 허위사실 등 처벌 조항을 좀 강구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행사가 바로 내일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과연 어떤 수단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산시의 공교육의 장을 리박스쿨로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잘못된 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전에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공교롭게도 오산시는 이번에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고 심지어 이 옹벽 사고는 사전에 두 차례 가까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대처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희생까지 불러일으킨 자치단체인데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자자체의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을 통해서라도,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 공식적인 자치단체의 행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서 5분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분 더 하고, 마지막 3분 추가질의를 한 네 분 정도 하고 저녁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윤건영 위원 바꿨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바꿨습니까?

양부남 위원님 3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오전에 이달희 위원님, 방금 전에 서범수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서울대 학생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후보자의 서울대 프락치 사건, 서울대학교 학내 민주화 운동 그 판결문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부는, 이게 총 4명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판결문을 보면 1명은 우리 후보자 이름 자체도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3명에 대해서 판결문에 여러 가지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후보자께서는 직접 구타를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 본인이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출마해서 본인의 선거운동 사무실이 학생회관 3층에 있었는데 선거운동 하면서 그 이루어진 일을 듣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화장실에 피해자가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본인이 진술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검사는 공소장에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위력.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하지 않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기재했고 이것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공소외인들과 함께 같이 폭행을 행사한 걸로 기재된 걸로 제가 분석하니까 그런 파악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서범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관여된 걸로 돼 있다, 그런데 여기 관여가 돼 있는데 관여를 안 했다면 재심을 신청하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판결문 전체를 보면은 3명 중에 손 모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한 뒤에 후보자께서 다방과 여관에 같이 있던 사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는 나이가 어리고 모든 것을 인정했고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

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했다는 의미는 사람을 직접 잡아매고 조사를 하고 구타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있었다는 부분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관여했다는 걸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명예회복이, 그 사유로 기재된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접 구타를 하고 막 때려서가 아니라 그때 그 학생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관여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한테. 또 더 나아가서 후보자가 때렸다고 진술한 사람이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실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공소외인이 썼던 자술서대로 쓰라고 강요를 당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은 관여했다는 의미가 직접 때리고 심문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린 학생을 같이 있어줬다는 그걸로 본인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관여를 인정한 거 아닌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대체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후보자님,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어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한 16만 3000개소 정도, 크고 작은 거 다 포함해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최초 사업 단계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지자체가 전부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벌목을 동원하면서 집중호우 시에 토사 유출이라든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원인들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2018년에 경북 청도, 2022년 강원 횡성, 23년에 영주·봉화에서 발생한 산사태 모두가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키우게 되고 우기에 축사와 민가를 덮쳐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 주민 생명까지 위협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 피해를 막으려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거지나 도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그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단 129곳만 조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의 경우

예 이격거리 관련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지금 알게 됐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까 PPT 자료 그게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건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격거리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주거지나 학교 옆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사실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이건 중앙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서 제대로 봐야 되겠다, 조례를.

저는 태양광 발전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역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는 그런 것을 장관 되시고 나서 살피셔서 이런 태양광 발전을 무분별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찬찬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조례를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마련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보여 주신 2018년, 2020년 이런 여러 사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산지의 경사도를 개정해서 지금은 산사태 우려가 없는 곳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정부니까, 이전에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산사태 얘기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빈발하는 지질학적 자연재해 방재관리 업무에서 지질 전문가의 중요성이 또 한번 더 강조되는 면이라고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 10년 연평균 산사태 피해 면적이 269㏊고 연평균 복구비가 거의 700억 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도 1만 2000곳에서, 10년 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2만 개소로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지금 계속 제가 지질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질학적 소양과 지질 전문가들이 이런 종류의 재난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진, 산사태, 가뭄, 자연재해 예방 분야에서 그 기저에 있는 암석과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지질학의 중요성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반공학조사도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할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시행령에서 8개 업무 분야를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질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토질 전문가는 되고 지질 전문가는 안 된다.

제가 행안부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약간 뭉개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질및지반기술사 시험 출제기준을 봐도 지진, 산사태 등 지질 재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지질에 대한 전문성과 공학적 지식을 보고 있고요 지반조사 및 설계에서 설계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보고 있고 토질에 대한 기반지식도 보고

있습니다. 토질과 지질 전문가들은 유사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질및지반기술사하고 토질및기초기술사 이게 통합 분류돼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여기에서 토질하고 지질을 통합해서 지금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간다는 거지요. 제가 지질학과 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 듣기도 했는데 토목과 학생들의 토질 수업 내용에도 지질과 학생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방재 분야에서만 소외시킨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후보자님께서 지질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죽 말씀드렸지만, 지질 관련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좀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충분히 이유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토질 분석을 하고 기초기술사라고 하는 건 인공 구조물의 기초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들만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자연재해의 영역에서 지질과 또 지반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제도가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희 위원** 특례시 특별법도 행안부가 지금 제정법을 준비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논의도 같이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질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후보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박정현 위원** 박근혜정부 때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원래 한 6500명 정도 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지금은 한 3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준 이유가 승진 차별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일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일하다 보니까 생계 곤란도 생기고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시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1% 의무 고용을 삭제했어요, 그 문장을. 삭제했으니까 더 이상 뽑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순기능이 있지요. 학업을 위해서 한다든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가정에 누구 편찮으신 분이 있으면 이거를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일반직하고 시간선택제하고 서로 순환이 되면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남아 있는 3500명에 대해서는 전일제로 전환하고 이 제도는 어쨌든 폐지를 하든 새롭게 재세팅을 하든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전일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전일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김부겸 장관님 계실 때도 공무원들이랑 계속 논의를 했고 실제로 행안위 차원에서는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하시면 방어적으로 하고 실제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한 제도라고 되면 그 추진했던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검토가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주권정부이기도 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경제를 기본으로 해서 국정이 운영됐다면 지금은 주민 참여와 주민 행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정부가 사실은 주민들과……

30초만 더 주시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하세요.

○**박정현 위원** 30초만 더 주십시오.

1분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방정부가 실제로 주민들과 여러 행정행위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 지방정부가 국민총행복과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총행복증진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행안부가 그것을 핸들링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21대 때 냈던 법인데요 그때는 행안부가 이렇게 훌륭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박정현 위원** 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기재부가 소관하는 걸로 법안을 냈었는데요.

○**박정현 위원** 행안부로 이번에는 바꿔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행안부로 법안을 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국민주권의 기본은 저는 마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도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돼야지 주민자치력이 높아져서 참여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아지고 실제로 지역을 혁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총행복증진법, 이름만 들어도 참 기대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께서 그런 법을 평소 꿈꾸셨다 하니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저녁 전의 추가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녁 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이후의 의사진행과 또 의견서 채택 과정에 대한 사전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지금 물난리 사태도 있고 또 해당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 이광희입니다.

장관후보자님, 모두발언에 보니까 민선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이것 좀 넘겨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1995년도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입니다. 2015년에 보면 24.60이지요, 지방세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2023년도에 24.60.

이것에 대한,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발언 때 말씀을 하신 것 맞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정책 지원을 하실 생각이실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우선 지방자치제가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더 낮아져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이광희 위원**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다 못 드린 지방의원……

이 표를 좀 봐 주시면 이게 지금 6기, 7기, 8기에서…… 갑자기 9기에서 483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수입니다. 대구는 69%고요 전북은 61.1%,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당연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2인 선거구 때문에 그렇고 또 광역지자체는 호남과 영남에서 나오는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이것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위주로 선거구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입장을 잘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선거구제의 최종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에 있기 때문에 논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강력하게 행안부에서 말씀을 드려 주셔야 되는 게 9기가 그 전에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10기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님, 저는 관직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안부장관후보자 수락을 하시면서 왜 하셨는지, 무엇을 해결하고 싶으신 건지 간단히 한 줄로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모든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능하되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모든 정부가 추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행안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락을 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압축해서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소명을 생각하신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행안부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조직법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인사혁신처와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혹시 중앙투자심의제도라고는 아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방정부의 예산 투자에 대해서 마치 중앙정부가 예타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듯이 그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100억 이상 보조금이 들어간다든지 등등 하면 국회 예산편성이 끝난 이

후에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다 설명했고 국회 심의·편성 과정을 다 거쳐서 확정된 예산인데 행안부 중 투심을 거치지 못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전혀 유능하지 않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제 후보자께서 그런 문제를 고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대한민국 중앙정부 조직은 9급에서 1급까지 일반직, 정무직, 전문직 등등 해서 그 체계가 해방 아래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은 극히 떨어져서 지금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급여의 문제도 있고.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서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장관후보자를 수락하셨으면 거기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민생지원금을 원래 8 대 2로 중앙과 지방은 분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거의 모든 곳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8 대 2에서 9 대 1로 조정을 했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7 대 3 비율로 노력을 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런 흐름으로 좀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8 대 2 흐름으로 흐르는 양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게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매칭비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요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제6항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권고처럼 다뤄지고 있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 위원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개선과 실행 방안을 꼭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우선 PPT를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게 지금 행안부가 뭐라 그럴까요, 운영지침으로 삼고 있는 게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이고요. 여기에 제가 일일이 다 적지 않았습니다만 30억 미만, 비영리 공익 플랫폼, 하나로마트 예외규정, 아마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시면……

혹시 후보자님, 생협 조합원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조합원은 아닙니다.

○**윤건영 위원** 집에서 생협 혹시 이용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용을 합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예시로 토론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생협 같은 경우에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보고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생협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적이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공익 실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협 관련 법에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이라는 부분이 영리 목적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 지역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실 수가 있어서, 아직 장관으로 임명된 게 아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인 거고.

두 번째 사례를……

다음 PPT 봐 주시면요.

하나로마트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님 아실 텐데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로마트가 전국에 2200여 곳 매장 중에 119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골에 계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나왔던 인구소멸 지역에서는 제대로 물건 살 곳이 없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지역화폐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물론 이렇게 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어렵짐작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했을 텐데 결국 피해는 농민과 애꿎은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례들을 더 추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이게 앞으로…… 일회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계속될 사안이라 가맹점 규정에 대한 것, 예외규정에 대한 것들을 좀 차

분히 들여다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생협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경쟁하고 있는 다른 소매 매장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촘촘히 따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아닙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성곤 위원**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불신하는데 가장 큰 불신 이유가 뭐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무사안일주의하고 소극행정입니다. 가면 실제 열이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돌리고 또 얘기하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돌리고 결국 되돌아와서 그 결과를 접하면 갈 데도 없고, 결국 그래서 후보님이나 저나 국회의원들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극적인 거, 책임을 지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 보고 혹시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제도나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제도로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면책제도가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책임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위성곤 위원** 저는 면책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더 주고 또한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어서 그런 행정행위자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의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직의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을 가장 불신하는 이유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호중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공직사회를 일신해서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믿고 신뢰하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에 이어서 시리즈로 공직사회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뚜렷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선의의 피해와 낙인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정권교체가 몇 년 만에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3년 만에 됐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 전에는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5년입니다.

○**이달희 위원** 5년이지요? 그 전에는요? 4년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달희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난 정부의 지방행정을 망치고 경찰을 망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 본인의 비리나 과오가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새로운 정부의 역점사업이나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전의 정부에서 수행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직사회를 더욱 위축시키고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위험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공직자는 로보트 태권V다. 첫째 힘이 세다. 둘째 조종 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움직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을 가끔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지요.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것을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지요.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책임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어 가셔서 지시를 내리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보다는 ‘어떻게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 보겠습니다’라는 아까 말씀하시는 책임행정 지는 그런 공직자가 바람직한 상이 아닐까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장관님께서 지셔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지시한 장관님이 지셔야 됩니까, 그 일을 해내는 공무원이 져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장관은 부내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후보자님, 4·3특별법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4·3특별법을 만들 때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정춘생 위원 김대중 정부 때 비로소 제정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사과를 하시고 비로소 진상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어렵게 느껴졌던 배·보상 문제가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정의 조항을 보면 ‘소요사태’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요사태라고 했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그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사태’를 삭제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18특별법처럼 4·3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다, 좌익의 폭동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처를 받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5·18특별법처럼 그런 허위사실과 왜곡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해서 처벌 근거조항을 만드는 법을 제가 발의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재명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되어 왔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4·3 유족들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정명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는 혐오 발언 또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4·3특별법의 목적·정의 부분에 그런 부적절한 규정이 있다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개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춘생 위원 많은 분들이 진상보고서에 담겨 있는 4·3의 정의를 준용해서 개정해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제가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뿐이 아니고 위성곤 의원님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장관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훈련된 무능’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처음 듣습니다.

○모경종 위원 보통 공무원분들을 조금은 안 좋게 평가를 할 때 ‘훈련되어 있는 무능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가 정부를 담당하는, 특히 국무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민 또는 주민들의 수를 우리가 챙겨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주민 수가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은데 공무원 한 명당 주민을 443명이나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공무원 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기준인건비제도라는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본인들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수요에 맞게 공무원들의 수도 더 늘릴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인건비제도에 막혀서 오히려 더 폐널티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유예를 해 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아마도 인천 서구가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가 공무원 정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에서,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는 겸단구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신설되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도 많고 정말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단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은 더 잘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기준 자체도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설 지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이 되면 통합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인천 겸단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들을 전혀 정부나 인천시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지난 행안부장관이셨던 이상민 장관이나 고기동 행안부장관대행 등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윤호중 장관후보자께서 챙겨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경종 위원** 신설되는 자치구, 신설되는 지자체는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후보자님, 첫 번째는 그냥 문제 제기인데요.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장관님하고 직접 관계는 없을 수도 있지만……

후보자님, 육군사관학교하고 태릉골프장, 저게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 저렇게 떡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21대 국회 때 심상정 의원께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전 방안 같은 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도 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주요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 해사, 공사, 경찰대학은 용인에 있다가 또 천안까지 내려간 이런 마당에 저게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대가 워낙 심하다 그런 이유 그다음에 제가 또 실무장교 한 분을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지방에 가면 교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저런 자리에 청년임대주택 같은 것 건설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지역은 일부 제 지역구인 구리시의 땅도 들어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이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태릉골프장과 그 인근 지역을 신규 택지지구로 개발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군용 골프장을 성남 골프장—지금 비어 있지요—그쪽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서울시의 비협조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이것 문제 제기를 어디선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역소멸, 육사 같은 데가 지방 가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한번……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문제는 국방부의 새로 장관이 되시는 분께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제가 며칠 전에 카이스트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봤는데 장관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라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한번 보시지요.

지금 특허청에 심사관님들이 계시는데—계약직 심사관님들—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매일경제 6월 달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 계약직 심사관, 계약직으로 하면 지금 이공계 퇴직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간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심사하면 심사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듣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IT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이해식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난이 일상화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난은 근본적으로 막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있는데 배수지나 펌프장 이런 게 다 50년 빈도, 뭐 100년 빈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비가 200년 빈도의 비가 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매우 힘들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상당히 탁월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재난관리부서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 그래서 고파에 반영하고 균평을 잘 주는 거지요. 승진의 기회를 더 이렇게 크게 열어 주는 거지요.

그것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바로 또 인사를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 재난 관리 그러니까 예방·대비·대응·복구 이 전 과정에서 재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방과 대비를 좀 더 잘하면 줄일 수 있고 또 복구까지의 과정을 또 잘하면 재난을 극복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직원들이 한 3000명쯤 됩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면 아마 정기인사 때 사무관 TO가 예를 들어서 한 이삼십 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실국별로 이렇게 해서 아마 배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재난 쪽에 있는 직원들을 더 주는 거지요, TO를 더 주고. 그러면 더 유능한 사람들이 오려는 유인이 생기는 거고 또 실제로 유능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이게 지금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저는 그게 관행으로 정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재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저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그래서 재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훨씬 더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재난 업무를 하면 승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사고파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단 행안부 직원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재난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재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PPT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제목이 ‘경기도 내 유사 규모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현황’인데요. 비교 가능한 유사한 도시가 경기도 네 개밖에 없고 지금 유사 지자체가 전부 100만 이상 특례시입니다. 여기 화성시가 지금 현재 일반구가 없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일반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이런 걸 만드는 데, 관공서 유치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배정에서도 아주 불이익이 많습니다.

우선 표 한번 봐 주십시오.

화성시 옆에 한자로 읽을 무 자가 있는데 일반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은 4 3 3 3, 이게 일반구의 숫자입니다. 기준인건비를 보면 화성시가 2130억이고 다른 유사 지자체의 평균이 3242억입니다. 이 기준인건비 차이가 무려 1112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불이익은 정말 행안부가 활력을 잃어 가는 지방도시들 활력을 되살리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새롭게 팽창하는 도시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런 불공평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일반구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진행에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그다음에 일반구가 없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 숫자도 그만큼 적은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화성시가 경기도 본토 해안선의 한 80%를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례시가 되었잖아요.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서.....

○**권칠승 위원** 우선은 일반구 설치가 첫째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는 중요한 단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21일부터 소비쿠폰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권칠승 위원** 이것 제가 중기부장관으로 있을 때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를 해 봐서 제가 진짜 아는데요. 이게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오지급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오지급 때문에 엄청난 민원, 행정 낭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비해서

이제 환수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지급이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보완이 있었는지 혹시 보고받은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이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우선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차별 지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이 2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혹시 오지급이 있었다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칠승 위원** 이게 건강보험 넘어오는 게 그 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시스템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는 자료 자체가 조금 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다른 부처라도 협조를 구하시고 향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한번 할 때 정리를 잘하셔야 다음에 또 훨씬 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관 임명되시면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우리가 12·3 내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렀던 과거의 여러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고 또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서면으로 해 주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뜻을 한 번 더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밝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용혜인 위원** 의지를 밝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선감학원을 통해서, 이미 과거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 국권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국가가 그런 잘못된 관행을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분들께 사과를 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혜인 위원** 최근에 제가 믿지 못할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돼서 경기도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송을 하는데 상고까지 이루어졌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부가 사과의 의지를 밝히지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면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했

던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이 선감학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책임행정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 피해자분들이 몇 분 정도 작고하셨는지 알고 계실까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거기까지는 제가……

○**용혜인 위원** 열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더 이상 상고로 경기도와 정부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저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경기도가 직접 만나서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상고 취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건의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얼마 전 법무부장관 정성호, 오늘 조금 전에 장관이 되신 것 같던데 청문회에서 과거 사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고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와 경기도와 함께 이 상고가 중단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선감학원 희생자 180여 명의 유해가 10평 남짓한 공설 묘지에 안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으로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특별법이 없어서 유해 안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감학원 특별법, 저랑 민주당의 이재강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성권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법 제정에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항소, 항고 취하에 대해서는 취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채현일 위원**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인구변화에 대비한 의정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했고 4년 연속 우수 의원연구단체

그리고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지역에서도 최초로 설치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차원에서 급속도로 초고령화에 대해서 정부 시스템과 행정서비스를 대폭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다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문자입니다. 그래서 호우나 폭염 때 노인들, 고령화된 노인들한테 제대로 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가 거의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번 경북 대형산불에서도 희생자 대부분이 안타깝게 고령층이었습니다. 재난문자 올 줄도 몰랐고 재난문자가 와도 문자를 볼 줄 모르고 동네 이장이나 주민, 친척들의 연락을 받아서 그때서야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문자 내용도 이미 산불이 코앞에 왔는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산불과 멀리 떨어져라’ 등 아주 막연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구체적인 대피장소나 행동요령을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쓸모없는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혹시 통신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재난 안내 및 대피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특히 외진 곳에 사시는 고령자분들에 대해서는 문자 정도로만 재난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피를 하실 수 있도록 직접 일대일 담당 공무원제 같은 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재난이 어떻게 확산돼 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대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거의 끝났는데요, 땅꺼짐 사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같은 경우도 붕괴 직전에 고가도로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데 구리시 인창삼거리에서도 포트홀이 발생해서 한번 사고가 났더라고요, 버스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땅꺼짐이 발생하는 도로 대부분이 지자체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에서 지반침하 안전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공개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나서 가지고 땅꺼짐 위험지역을 했는데 이런 서울시의 폐쇄적인 행정에 대해서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정부가 좀 협업을 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지하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경찰국 폐지 관련해서 후보자님, 지난 정부 때 경찰국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경찰국이 그러니까 행안부의……

○서범수 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경찰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경찰 장악…… 인사로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목적도 불순하고 절차도 정당성을 결여했다. 그래서 저도 경찰국을 폐지해야 된다. 경찰 출신 입장에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옳게 경찰을 도와주지 못한 경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 지휘부도 각성·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회고를 해 보면 일선 경찰관들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는 밀어붙였고 그리고 지금은 경찰국을 폐지한다니 적극 동참한다고 아무런 일언반구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대내적 이든지 대외적이든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든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거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왜냐, 이렇게 해야 다시 그런 전철을 끊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경찰국을 폐지하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기본적으로 외청으로서 인사와 재정 그다음에 정책,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범수 위원 이렇습니다. 사실은 법무부하고 검찰청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 과거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다르지요.

○서범수 위원 다릅니다. 경찰청은 예산편성권도 갖고 있었고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다.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소방을 비롯해서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경찰이나 소방, 이 제복 부서의 울타리가 좀 돼 주십시오. 단지 그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텁게 해 주시되 간접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기관의 독립성과 또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나머지 하나는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 방안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5극 3특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또 3특입니까? 5극은 그렇다 치더라도…… 잘못하면 이게 특정 지역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더

니 비수도권에는 3특과 비3특으로 또 나눌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쪽으로 편중이 안 될 수 있도록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5극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방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3특이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훈** 저도 장관후보자에게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처에 대한 사용처를 이렇게 좀 더 넓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논쟁을 한 6개월 전부터 죽 행안부 담당 부서하고 해 오다 보니까 여전히 행안부가 생각을 많이 안 바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차 추경 하기 전까지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용성이 없다,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다. 두 번째로는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부자 큰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가난한 지역에서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 줘도 가난한 도시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해서 사용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아까 이야기한 소비 진작 이외에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아주 중소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소비의 마중물 역할.

대도시에서는 하나로마트 말고도 수많은 소비지가 있기 때문에 전통상권도 사실은 중소도시의 전통상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일반 마트도 중소도시하고 대도시의 마트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중소도시라고 하면, 제가 표현하면 이런 정도로 일단 이야기합니다. 10만 도시 미만의 중소도시의 읍면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위 말해서 읍면동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사용할 데가 거의 없다. 소위 말해서 2000 미만의 면 단위가 거의 부지기수고요. 읍이라 할지라도 1만 명 미만의 읍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상권의 형성은 주도 상권이 역외, 그러니까 인근의 20만 도시나 대도시의 소비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옆에 있는 대도시에 가서 소비하고 농협 직원도 대도시 가서 소비하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진작 효과, 소비의 역외 유출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지원 없이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상하니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한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색했어요.

정말 이번에 3차 추경 때의 설계처럼 지난 시기에 됐었다면, 1차 추경 아니면 이전에

됐었다면 훨씬 더 됐을 거예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까지 탄압해 왔어요. 발상이 이번에 2차 추경 때 설계가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여전히 아까 윤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맹점포에 대한 제한은 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 문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의 각종 기준·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지금 이 가맹점은 내부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역외에 있는 인근 도시 대도시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큰 도시로 유출되는 그런 상권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는 소규모 중소도시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만약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농촌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 또 소비쿠폰이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소상공인이나 해당 지역의 여러 여론들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농촌지역 의원님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꼭 좀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윤건영 위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조율이 좀 안 돼서……

○**위원장 신정훈** 지금 회의 진행에 관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해 보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3차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여섯 분만 더 질의하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후보님,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청사건물 취득에 관한 법적 권한은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서 행안부에 있게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후보자께서는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와 당위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그리고 해운·물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남아를 통한 항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서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그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해양·물류 산업의 수도로……

○**고동진 위원** 예, 이해합니다.

저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

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해양수산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명확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까지 해수부 그리고 물류기업들의 본사, 또 관련 행정기관들이 주요 항만도시에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거기에 따를 수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행안부가 관할하는 대통령령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실제 제2조를 보면 해수부 소속기관으로 이미 부산을 비롯한 포항, 울산, 마산 등 열한 곳에 지방해양 수산청이 존재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이미 부산에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 체제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영남권 표심을 고려한 포퓰리즘의 결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취지라면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농림부가 농촌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수부가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목적으로 구축됐는데 정작 중앙행정기관이 또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 조성 취지에도 부합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가 지난 10일에 부산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2개 빌딩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고동진 위원** 이게 정부청사관리규정 제7조를 보면 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임차의 방법으로 하는데 이 취득의 최종 결정은 행안부가 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청사취득계획을 해수부가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조금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1분만 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증을 해야 된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내부 검토하시겠지만 절차만 정하는 기준이 무시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는 심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장관이 6개월째 공석이기 때문에 차관이 장관직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검토 결과 내려진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성, 특히 행정능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검토·분석을 하시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당부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의 업무는 타 부처와의 협의나 조정보다도 해운 그리고

해양 산업이 결집되어 있는 부산 지역의 기업들 그리고 그 기관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후보자님, 소비쿠폰 추경 통과한 예산 금액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13억 정도 되는 걸로…… 13조, 죄송합니다.

○**박수민 위원** 예, 13조. 저는 소비쿠폰의 효과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의석수나 여러 가지 관계상 일단 추경은 통과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 달 후에도 경기를 진작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경제성 분석은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지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13조 원짜리 보고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객관적이고 철저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민 위원님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분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분석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거뒀는지를 분석하고 향후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또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첫 질의 때 다주택자 매각 서약을 당내에서 강요하셨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 취지는 언행일치입니다. 시장경제는 각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익이 달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키기 어려운 서약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법제화되고 관행화될 때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오히려 언행일치가 후퇴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스캔들이 터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셨기 때문에 공직사회, 지방사회 등등에 많은 지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속에서 그것을 강제하고 제안하고 권유하고 지켜지지 못했을 때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주택자 매각 서약은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견해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행안부장관일 때, 취임하시게 되면 어떤 입장을 가지실지 꼭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매각은 다주택 상태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의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여 매각 또는 중여를 서약해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라는 취지의 서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에, 선출직에 나서려는 사람으로서 1주택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당에서는 그러한 서약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후보자님, 피곤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양부남 위원** 고생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 뻥뻥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여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출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표와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차 60분 초과한 현황 볼 때 사건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재 119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에서 현장에 도착해서 어느 병원에 바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원에 전화를 하면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No)하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21년 12월 달에 개정돼서 2022년 12월 달부터 시행되면서부터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주체 중에서 119구급대가 후송하는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우선적으로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병원은 일단 환자를 수용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시 전원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PPT.

이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했어요.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의료 뻥뻥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물론 환자겠지만 소방대원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오늘 발의를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도록 장관이 되시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경북과 경남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보면 대형 산불 진화 지휘권자는 자치단체장, 산림청장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불을 끄는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방은 산불에 대한 기본 업무가 지원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PPT.

그런데 산불 진화 인력을 보면 산림청 소속보다는 소방대가 훨씬 인력이 전문화돼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경남 불이 났을 때도 실제로 산불을 소방이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산불의 진화 주체는 소방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산림청, 현실과 법률이 불일치하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장관님은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장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형 재난 발생 시 복구·대응을 총괄 조정하고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이 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긴급구조통제단

장인 소방청장이 산불 등 모든 것을 지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불이 났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주든지 법률을 일치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했는데 제 질문을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대형 산불에 대한 진화 지휘권을 어디에 두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재난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원칙은 재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을 지휘하고 나머지는 인력과 장비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어디가 많은가를 떠나서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휘 통솔하에 모든 협력을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재난 현장을 수습하는 지휘체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후보자님, 그 현장 지휘체계가 그동안은 맞았는데요 기후위기에 따른 대형 산불이 나니까 이번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아주 대형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우리 국회에서 조사해 보니 핵심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동시 다발적 산불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와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불 대응 업무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진화하고 산림청이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방청이 주관하고 산림청은 지원하는 산불 대응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불, 옆으로 번지는 산불하고 이런 기후위기에서 일어나는 이번 초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기후에 따라서 2km 건너가서……

PPT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보시면, 넘겨 보세요.

영덕군.

또 넘겨 보세요.

이게 지금 이번에……

계속 넘겨 보세요.

저렇게 바닷가에 있는 배까지 타는 이런 불은 기존에 있던 옆으로 번지는 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방 체계를, 산불 진화 체계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고요.

그동안 경북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행안부의 공직자들께서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에 많은 인력들이 10여 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복구 지원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행정을 맡아 보니 현장에 답이 있는데 이번에 경북의 그 많은 산불이 그래도 그나마, 아직 재건·복구는 안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일상 지원은 행안부가 현장에서 머물면서 체계를 빨리 잡아 가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산불특위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불 난 곳에 그냥 복구가 아니고 새로운, 마을이 사라지지 않는 스마트팜이나 골프장이나, 이미 불난 곳이니까 그런 곳에 특례를 많이 줘서 새로운 재창조타운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현재 공무원노조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등 특수직……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특수직렬.

○**정춘생 위원** 예,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이 안 되고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노조 간부 같은 경우 전임자들은 타임오프제를 도입해서 근무시간을 면제받고 임금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등 직장협의회는 타임오프제가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활동이 제약적이고 고충 상담이나 권리 대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지금 말씀 주셔서 알게 됐고요. 직장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이라든가 이런 직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개선점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치안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타임오프제 도입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대변하고 고충을 상담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내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제약이 있고 해서 이런 의견들을 국회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무원직협법을 개정해서 타임오프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영국도 경찰은 노조가 안 되고 직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임오프제 도입하고 해서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도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벌써 13만의 경찰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들이 자신의 권익 대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타임오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법 개정안 냈으니까요 행안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후보자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후보자님이 고생하셨지요.

후보자님, 17년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80만 원 유죄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나서 항소 안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서범수 위원** 결국 판결을 인정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국민적 공감대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5월 1일 이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월 2일 날 발의를 했고요.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연휴 지나고 법안소위도 안 거치고 바로 5월 7일 날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다수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는, 민주당은 또 한쪽에서는 법 개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대선 기간 중에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상대 후보를 수많이 고소·고발을 진행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문수, 박정훈, 이준석, 한덕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허위사실공표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

위에 대한.....

○서법수 위원 행위 유형이지요. 이게 다 행위 조항입니다. 행위 조항인데.....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자신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서법수 위원 그래서 어느 쪽이 진심인지 헷갈린다, 제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자신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법수 위원 그렇지요, 그 행위 조항.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그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서법수 위원 그렇지요. 이 조항입니다. 한쪽은 폐지하려고 하고 한쪽은 그걸 이용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어느 쪽이 진심인지 과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대부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행위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위인설관을 넘어서 위인설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하는 옛날 프랑스 왕정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서법수 위원님, 선거법의 개정 논의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래도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이고 5선을 지내신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1분 정도만.

○박덕흠 위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이 소비쿠폰 사용처, 제가 먼젓번에 차관님한테도 견의를 했었거든요.

군 단위에 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인구소멸지역 특히? 이런 쪽에서는 소비쿠폰이 하나로마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또 거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거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 안 되시면 그래도 면 단위만큼은 소비쿠폰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차관님한테도 부탁은 드렸었지만 검토를 해 보신다 그랬어요. 장관님도 검토를 해서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선처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귀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생회복과 재난안전, 국민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성심과 국민의 염원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가 국민의 안전을 넘어 행복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을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3.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1시58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간사님이 좀 보완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금일 꼼꼼히 점검하고 또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금 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준에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급하기 때문에 산자부·기재부·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협치와 응원, 동시에 국민들을 위한 과제의 약속을, 신속하고 좋은 방향으로 꼭 관세 협상을 해내라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행안부장관 같은 경우는 수해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분일초라도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희의 전향적인, 대승적인 판단이 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의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정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무리 말씀 한말씀……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요? 예.

○**서범수 위원** 박수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극한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좀 더 숙의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재난 상황을 감안해서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 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여기 안 계시지만 후보자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지공무사의 정신으로 정말 장관이 되신다면,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고생해 준 국회공무원,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산회)

---

#### ○출석 위원(22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종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한병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 ○출석 공직후보자

윤호중